

교육개방

2012
Autumn
Vol.39 No.3

특별기획 1

인성이 가장할 수직이다!
취기적 하이를 80만 원, 영안과 대학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구상

특별기획 2

특별기획 : KBS · SBS · 대우방송 심정, '100여 줄은 대학 강의' 수상자 5인의 장이다

세계의 교육

학교시설 업그레이드, 해외사기를 통해 배운다
대만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제 개편
스마트교육 해외 우수사례

초대석

고양시 삼일 철학 시 · 코트교육정책의와장 · 경상남도교육감

이슈와 전망

국립대학 삼일확정안 수립과 향후 과제

정책과 현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현장르포

사계로 비쳐도 꿈을 잃는 SMART 중심 교육 - 세종특별자치시 원마을 삼일초등학교
꿈을 잃은 학교 상록보다 사립교육 우선, 인성교육이 살아 있는 현장 - 강서 박진 문원중학교
교육정책소셜 미디어인성 대한민국 - 이경라



05



35



44



67



94

교육개발 2012 Autumn Vol.39 No.3

04 파워 인터뷰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2 특별기획 1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천세영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위기의 아이들 80만 명, 현황과 대책

한유경 /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구상

송기창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5 특별기획 2

좌담회 : KEDI · SBS · 대교협 선정, '100대 좋은 대학 강의' 수상자 5인의 강의비행

44 세계의 교육

학교시설 업그레이드, 해외사례를 통해 배우다

조진일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성철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대만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제 개편

김종갑 /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스마트교육 해외 우수사례

정순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스마트교육기획부 부장

64 초대석

고영진 신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경상남도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발전방안'

70 이슈와 전망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추진과 향후 과제

장보현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과장

78 정책과 현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박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85 현장르포

세계로 미래로 꿈을 엮는 SMART 참샘 교육

-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참샘초등학교

유소연 / 참샘초등학교 교사

꿈을 품은 학교! 성적보다 사람교육 우선, 인성교육이 살아 있는 현장

- 경기 과천 문원중학교

김형표 / 경기일보 기자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 여명학교

변정훈 / 여명학교 교사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김태완

편집장 | 문성룡

홍보출판심의위원 | 이재분(위원장), 김미숙, 문성룡

문성빈, 박병영, 박영숙, 서영인

신철균, 유효순, 이강주, 장혜승

편집실 | 정경아, 정미영, 한지연, 김원기, 신소민, 황혜림

디자인,인쇄 | 지성토탈 02-2272-8288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발행 | 2012년 9월 28일

계간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등록번호 | 2011년 1월 21일

정가 | 6,500원

구독문의 | 02-3460-0319 keditor@kedi.re.kr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대담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POWER INTERVIEW

강동석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해양과 인류가 처한 환경과 문제,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와 해양 신기술 개발 통해 극복하자는 메시지 국제사회에 던져”

“박람회 시설, 2021년까지 콘텐츠 · 마리나 ·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특화된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될 것”

“여수세계박람회는 처음으로 바다를 박람회장으로 꾸민 해양박람회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선언을 채택하여 해양과 인류가 처한 환경,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지속적인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와 혁신적인 해양 신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습니다.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갖는 의미 그리고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동석 위원장은 이어, 이번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 “목표 관람객 수 800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공연 프로그램과 전시물들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았다”면서 “성공한 박람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또, 폐막 이후 박람회장 시설의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계획과 연계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면서 “27만1000㎡ 규모의 박람회장은 마리나시설, 해양레포츠, 숙박시설, 쇼핑몰 등 휴양 · 상업시설을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9월 10일(월) 여수시 덕충안길에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여수엑스포박람회 개최가 갖는 의미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 성과와 평가, 향후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93일 동안 열리면서, 크고 작은 진 기록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내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김태완 원장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여수세계박람회가 지난 8일 12일 폐막되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갖는 의미, 어젠다, 특징 그리고 폐막이 남긴 족적과 사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석 위원장 여수세계박람회는 처음으로 바다를 박람회장으로 꾸민 해양박람회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였습니다. 104개 국가와 UN, 유네스코,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해양보존과 발전방법을 다양한 전시관과 전시물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수선언을 채택하여 해양과 인류가 처한 환경,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지속적인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와 혁신적인 해양 신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습니다. 여수선언은 해양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담은 것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잇는 인류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는 지역 소도시에서 열린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여수는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었고, SOC, 관광인프라 등을 구축해 아시아 최고의 해양레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지역균형 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93일 동안 열리면서, 크고 작은 진기록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내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강동석 위원장 인구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소도시에서 열린 박람회에 무려 8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BIE(국제박람회기구)에서 예상한 700만 명에 120만 명이나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인구 70만 명의 사라고사엑스포 관람객이 55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여수세계박람회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는 문화엑스포라는 별칭에 걸맞게 거리공연, 주제국 특별공연, 한류를 이끌고 있는 K-POP 스타들의 엑스포 팝페스티벌 등 무려 13,300여 회의 공연이 박람회장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중 104개 참여국의 전통공연 및 대표공연도 270여 회나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이국적인 문화공연을 여수에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가국이 해외에서 들여온 전시물은 대략 1,000여 건으로 40ft 컨테이너 60여 대, 20ft 컨테이너 70여 대의 양이었습니다. 해외 반입물품의 신고원가로 보면 140억원의 물자이며 국보급 문화재 등 실 가치는 따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박람회 성공개최의 밑바탕이 되었던 자원봉사자는 93일간의 긴 여정에 맞춰 10기로 나눠 11,3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중 560명 가량은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독일, 타이완 등에서 온 유학생과 거주자였습니다. 이렇듯 국제행사 면모에 걸맞은 인재들의 많은 참여로 세계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멀고 불편하지만 전국과 세계 곳곳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석률도 80%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치러진 행사의 자원봉사자 참석률이 70%대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 4대 국제행사답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권도엽 국토부 장관 등 국내 사회지도층 인사 6,700명이 박람회장을 방문해 한국관, 주제관, 스카이다워 등 전시시설들을 둘러보며

전시 콘텐츠에 대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5. 28)을 비롯해 스웨덴 국왕 내외인 칼 구스타프 16세와 실비아 왕비(6. 1), 모나코 국왕인 알베르 2세(6. 3), 빌렘 알렉산드로 네덜란드 왕세자(6. 18) 등 총 100여 개국 2,801명의 인사가 여수세계박람회를 방문해 박람회를 관람하였습니다. 각국의 주요 인사들은 여수세계박람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해양에 대한 메시지에 적극 공감하며 전시 콘텐츠를 본 후 큰 감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태완 원장 위원장님 나름대로 이번 여수세계박람회를 진단,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동석 위원장 성공한 박람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목표관람객 수 800만 명을 달성했으며, 또 하나의 기준인 박람회 주제전달과 관련하여 공연·전시 콘텐츠가 국내외 전문가와 관람객들로부터 크게 호평 받은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장 초기 예약제 등의 시행착오도 겪었으나 가장 세심하게 신경 썼던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 깨끗한 화장실, 혼잡관리, 폭염 대비 등이 잘 이뤄졌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93일간 안전사고 없는 ‘무사고 박람회’를 치른 것과 박람회 기간 동안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준 여수 시민, 밤낮으로 애써준 종사자, 본인 일처럼 열심히 노력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김태완 원장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고, 해프닝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석 위원장 사람, 교통, 숙박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은 사람이 넘치는 반면에, 여수에 사람이 없어 박람회장에 잔디를 심는 사람도 수도권에서 데려와서 일해야 했습니다. 식당도 관람객이 몰려서 서비스 인력을 더 늘리고 싶어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멀리서 인력을 데려와야 하니 숙박, 교통 등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숙박은 처음부터 남해안권 전체로 분산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순천, 광양, 구례, 남해 등이 강북에서 강남 넘어가는 시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박람회 끝나고 인근 지역들이 모두 박람회의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종교계와 시민이 처치스테이, 템플스테이, 홈스테이, 마을회관 등 다양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처치스테이는 BIE도 모범사례로 꼽을 정도입니다. 교통은 박람회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철도, 고속도로, 해운, 항공 등 10조 원 가량의 SOC를 확충했습니다.

“인구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소도시에서 열린 박람회에 무려 8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BIE(국제박람회기구)에서 예상한 700만 명에 120만 명이나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는 문화엑스포라는 별칭에 걸맞게 거리공연, 주제국 특별공연, 한류를 이끌고 있는 K-POP 스타들의 엑스포 팝페스티벌 등 무려 13,300여 회의 공연이 박람회장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각국의 주요 인사들은 여수세계박람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해양에 대한 메시지에 적극 공감하며 전시 콘텐츠를 본 후 큰 감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여수는 수도권에서 시간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었지만 박람회를 계기로 3시간대 권역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수는 수도권에서 방문하기에 멀다고 인식되는 지역이었고,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를 계기로 관광객들이 실제로 줄어든 교통시간을 체험했고, 앞으로 박람회장이 아시아 최고의 해양관광레저단지으로 개발되면 남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폐막 이후, 박람회장은 현재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강동석 위원장 여수세계박람회장이 2021년까지 콘텐츠·마리나·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 3개 구역으로 특화된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됩니다.

내년 2월 중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청산하고 특별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 부지·시설관리, 민간투자 유치, 기념사업 등을 총괄토록 할 예정인데, 매각 일정은 사업설명회 9월, 사업제안서 요청 10월,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접수·평가 11월, 사업자 선정 12월입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계획과 연계해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을 잇는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람회장 내 한국관 엑스포홀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부지를 2년 내 민간에 일괄매각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7만1000㎡ 규모의 박람회장은 마리나시설, 해양레포츠, 숙박시설, 쇼핑몰 등 휴양·상업시설을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될 것입니다.

박람회장을 구역별로 나눠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리조트 구역은 연면적 3만㎡ 이상의 쇼핑몰과 연면적 2만㎡ 이상의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워터파크(부지 4만4400㎡)와 해양공원(2만8000㎡)도 조성

“폐막 이후, 박람회장은 현재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박람회장 내 한국관 엑스포홀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부지를 2년 내 민간에 일괄매각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7만1000㎡ 규모의 박람회장은 마리나시설, 해양레포츠, 숙박시설, 쇼핑몰 등 휴양·상업시설을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될 것입니다.”

됩니다. 복합콘텐츠 구역에는 박람회 주제계승과 공공성을 감안해 중·저가형 숙박시설(부지 1만2600㎡) 컨벤션센터(부지 4만4000㎡)가 건립되고 복합문화공간(부지 7869㎡)과 테마거리(부지 7000㎡)가 꾸며집니다. 해양레저 구역에는 해양휴양을 목적으로 5만1000㎡ 부지에 요트계류장과 요트전시장, 마리나 클럽하우스, 요트 정비·수리시설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을 해양특구로 지정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감면과 개발부담금 감면, 감정이 매각 및 매각대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한국관, 주제관 등 세계박람회 정신 계승을 위한 영구시설은 이달 중 리모델링 계획을 마련해 재정비한 뒤 내년 하반기에 재개장할 방침입니다.

김태완 원장 여수세계박람회가 지닌 교육목적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박람회기간 동안 초·중·고생들은 물론 대학생들도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기간 동안 또는 폐막 이후, 이들 학생들에게 여수세계박람회는 어떤 교육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역할을 하였으며, 또 앞으로 할 것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동석 위원장 여수세계박람회는 바다를 주제로 한 최초의 '해양 축제'이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바다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2조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21세기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무역 2조 달러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자원 개발은 국가 사활의 문제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주제관을 통해 멸종위기의 해양생물인 듀공과의 가상 만남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후환경관은 남극 눈보라의 체험과 지구멸망의 순간을 구현한 동영상으로 기후 온난화 문제가 눈앞에 닥친 현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양산업기술관이 해조류로 자동차를 만드는 미래 모습에서 해양산업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전달했다면, 해양문명도시관에서 미래 해중도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양을 통한 인류의 미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흰고래, 해룡 등 보호하고 연구해야 할 바다생물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관에 참여한 국가들도 해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시물들로 전시관을 채웠습니다. 해수담수화를 보여주는 프랑스관, 심해탐사를 해볼 수 있는 독일관, 물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스위스관, 거북이 보호활동을 보여주는 아랍에미리트관 등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바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느낄 수

“여수세계박람회는 바다를 주제로 한 최초의 '해양 축제'이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바다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2조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21세기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를 관람한 학생들이 해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양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와 인류에 무한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김태완 회장 위원장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강동석 위원장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한국교육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너무 치열한 경쟁에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건전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학부모들의 책임입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학부모들이 이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경쟁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회인으로 자라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교육과 경쟁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공교육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중요하듯이 학교나 민간기업의 지도자가 바른 생각과 이념을 지녔다면 그 조직도 지도자의 이념이 자연스레 반영됩니다. 또한 지도자는 희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생은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즐겁고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계가 올바른 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써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는 데 도구가 되는 교육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사람의 저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이번 세계박람회에 참여한 100개국 이상의 참가국에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코리아, 코이안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세계박람회를 한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2000만 명 인구의 상해엑스포보다 내실 있고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다시 한번 절감한 것도 적절한 동기부여와 지도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국민 각각의 성취동기가 중요한 사회발전 요인이 될 것이고, 이를 이끌어주는 지도자 그룹의 희생이 대한민국을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완 회장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울러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향후 거취랄까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석 위원장 지난 8월 31일자로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파견 온 공무원 상당수가 복귀를 했고, 행사를 위해 채용했던 직원도 조직위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행사 뒷마무리와 사후활용을 위한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가 슬림화되었습니다. 사후활용 기구는 여수박람회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내 설립 하되, 연내에 여수박람회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후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년간 공직생활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들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박람회만해도 조직위원회와 운영인력, 자원봉사자 등 일하는 사람이 장내외에 일 만명 가까웠고 이들이 다같이 한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박람회장이 세계적인 해양리조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초까지 운영주최를 선정해 주고 소임을 마칠 예정입니다.

김태완 원장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또,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강동석 위원장 교육문제는 학교와 가정이 중심이 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가정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선생님을 믿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설사 특정 선생님이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를 매도해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들이 흔히 '너희 선생'이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학교에서 야단맞고 오면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라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왜 너의 선생이...'라고 하며 자녀 앞에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

“어느 조직이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중요하듯이 학교나 민간 기업의 지도자가 바른 생각과 이념을 지녔다면 그 조직도 지도자의 이념이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또한 지도자는 희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생은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즐겁고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계가 올바른 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써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는 데 도구가 되는 교육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PROFILE

1938년 전북 전주 출생. 경희대학교 법률학과를 중퇴하고, 제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관('61)을 시작으로, 항만청 총무과장('77-'79),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79-'80), 교통부 관광국장('80-'81), 도시교통국장('81), 육운국장('81-'82), 기획관리실장('87-'92) 등을 거쳐, 해운항만청장('92-'93),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93-'94),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94-'99),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99-'02), 한국전력공사 사장('02-'03), 건설교통부 장관('03-'05)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7 전북세계물류박람회 ·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치러냈다. 대통령 표창('77), 홍조근정훈장('88), 황조근정훈장('93), 금탑산업훈장('02) 등을 수상했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글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루에 한 명 꼴로 10대 청소년들이 자살한다고 한다. 하루 평균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하며, 학업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생활 부적응이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ADHD 유병률은 전 세계 아동들의 평균 3~5%를 훨씬 넘은 약 5~12%로 심각하지만,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며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욕설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만 유독 그러할까? 옛날부터 그러했던 것 아닐까? 우리나라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 아이들도 그러하며, 요즘 유독 그러할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도

그러했다. 그러나 큰 일인 것은 그 정도가 과도하여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에 예외는 없으며, 아니 땀 굴뚝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잘못 가르친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겪은 일은 우리도 겪는다.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교육적 기능이 해체된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청소년들의 일탈과 실업이었다. 산업화가 끝난 20세기 초엽 유럽의 석학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했다. 유아기 때 축적된 결핍과 억압은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지만 도덕적 초자아의 발달이 더딜 경우 의식의 세계로 치받아 올라와 정신적 병리로 나타나고 급기야는 범죄로까지 치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구의 산업화는 수백 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면서 치유의 지혜를 갖추어 왔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처럼 급격한 성장통을 겪지도 않았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망국의 설움과 식민의 압제를 견뎌야 했고, 해방을 맞은 기쁨도 잠시 인구 열 명 중 한 명이 죽어나간 동족상잔의 피비린 나는 전쟁의 참화마저 겪어야 했다. 반세기 넘어 지속되어 오는 분단사는 극심한 반목과 이념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다행히도 국토의 반과 동족의 반을 잃은 채였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가르친 보람으로 우리는 어느덧 세계 10대 강호의 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부자 나라의 하나로 변신했다.

아뿔사 그런데 통일을 이루고 진정한 세계 일등국가 일등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예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승화된 발전모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선진국들이 겪었다 하여 답습할 일도 아니며 역사의 법칙이라 하여 순응만 할 일도 아니

다.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하며 새로운 법칙을 창조해 내야 한다. 그것이 자연사와 인류사가 큰 진화의 수레바퀴를 굴러 온 진리이기도 하다.

먼저 겸허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을 잊고 있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자는 누구이며 그들과는 어떤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II. 우리의 소중한 전통들이 사라져 버렸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 간의 소통 부족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등 어른 공경의 미풍양속이 사라지면서, 본을 받아 전통으로 이어가야 할 뿌리 깊은 부모의 지식과 지혜가 경시 받고 고전은 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네 아이를 내 자식처럼 여겼던 공동체의식은 약화되고, '내 아이만 최고'라는 생각이 앞서고 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부족은 관계단절로 이어져 결국은 서로가 소외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존경할 만한 스승은 찾기 힘들다는 말이 회자되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조선



시대 '오성과 한음'의 스승이 가르친 '모름지기 친구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친구를 괴롭히는 일부 학생들의 뼈틀어진 행동이 학생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생명경시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되돌아보면 이 모두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후대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용에 이르기를 천명(天命)을 일러 성(性) 곧 인성이라 했으며, 인성은 하늘의 명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라 했고, 인성대로 사는 것을 도(道)라 하였으며 그 도를 닦는 것을 교(教), 곧 교육이라 하였다. 또한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여 모든 세상살이의 근본을 수신(修身)이라 하였는데, 고종황제께서 밝힌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시작된 우리의 근대교육에서 으뜸가는 교과목을 수신으로 하였는 바, 우리 선조들은 인성교육을 교육의 근본으로 삼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덕에 20세기 초엽 나라를 잃고 고통 받는 우리들을 향하여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동방의 예의지국이 언젠가 활활 타오를 것이라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우리는 교육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대한

민국의 경제 기적을 또한 이루어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기로이고, 이 역시 역사의 법칙에 속한 것이라고 할 때, 아마도 우리도 많은 선진국들이 걸었던 인성교육 실패를 답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선진국 현상의 대표적인 징후는 가정해체와 청소년의 일탈 및 범죄 그리고 실업이다. 이것은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지고 국력의 핵심요소인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쇠망은 자명한 경로로 이어진다.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의 근저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를 진단한 것 또한 이와 같은 현대정신병리의 근원이 불안정한 자녀양육환경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즉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구미선진국이 걸어온 것처럼 물질만능과 가족해체의 길을 걷다 보면 오늘 날과 같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인성 해체는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근대 지식체계 과정에서 교과교육 이외에 도외시되어 왔던 인성의 요소들을 되살리고,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전인교육의 요소를 되살리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Ⅲ. 인성교육은 디폴트 값이다

디폴트(Default) 값은 컴퓨터의 초기 설정 값을 의미한다. 디폴트 값이 컴퓨터에서 사라져 버리면 컴퓨터는 멈추어 버린다. 인성교육은 인간역사의 디폴트 값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이 사라지는 일, 곧 인성교육이 실패하는 일은 인간역사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문제는 종말은 큰 소리를 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눈치도 채지 못하게 도둑처럼 온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 종말에 대한 예고는 늘 있어 왔고 선각자들과 예언자들은 외쳤다.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닫았을 뿐이고 눈을 감았을 뿐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구미선진국에 서서히 닥쳐 온 인성교육의 위기는 오늘날 서구문명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끝에 눈부신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사한 현상을 겪기 시작하였다. 물론 아직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11년 대구의 학생자살사건으로 부터 한 대 얻어맞은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멍멍한 채로 어리둥절해 있으며 그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뚜렷한 해답은 없다. 그나마 이런 예방적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이제야 말로 인성교육이 대한민국 사회의 디폴트 값임을 알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그 치유책을 찾는다면 서구선진국들이 걸어왔던 경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설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인류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물론 인성교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인성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무관심에까지 이르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에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그 선진국들이 또 길을 찾을 것이고 그 길을 그 때 따라가면 될지 모른다는 안이함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화, 산업화에 신음하던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는 지켜보았듯이, 교통사고 불명예를 쓰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교통선진국이 되었듯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산업강국으로, 이제는 문화를 수출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인성은 가르쳐지는 것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피가 생길 것이다.



IV. 공감의 시대는 새로운 인성을 요구한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공감의 시대(The Empathic Civilization)’에서 천명한다. 인간은 원래 공감하는 존재(Homo Empathicus)이다. 공감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인류의 진화사는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을 계발해옴으로써 가능했다고 한다. 지구의 지배자로 백만년 넘게 살아 온 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화와 변형은 필연적으로 엔트로피를 높이고 높여진 엔트로피는 또 다른 소멸을 불러온다. 그러나 인류는 그때마다 공감의 역사를 재창조해 왔다고 한다. 현대문명은 중세를 딛고 일어선 이성과 계몽의 시대에 활짝 핀 인류의 공감력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문명은 죽음의 엔트로피를 쌓아 왔고 미증유의 종말예후를 곳곳에 보여주고 있다. 서구선진국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실업과 범죄에 시달리고 있으며 후진국들은 아직도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설파한다. 바로 이 지점이 자연의 진정한 생명원리인 공감역량이 요청되는 때라고 한다. 끝없는 탐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공감과 공생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에너지 소비에 기반한 2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3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감은 이성의 시대로 열어온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은 인간에게 신성에 얽매인 부자유를 풀어주었지만 오만에 치달고 오늘날과 같은 인성파탄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공감에 기초한 공생의 비밀이 우주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성과 개성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자만하였으며, 르네상스를 가져 온 메디치가 풀었던 마음의 비밀은 공감의 역사였음이었음도 모르고 이성과 계몽의 잔치에만 열을 올렸고 마침내 그 이성은 난폭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규정된다. 곧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만 산다는 것이다. 곧 함께한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일이 공감의 비밀이며, 이를 잠시라도 잊어버릴 때는 그 어떤 생물학적 종에게도 재앙과 소멸이 닥쳤다는 것이 진화사의 진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결국 공감으로 귀결된다 하겠다.



V. 인성교육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인성의 핵심은 무엇이며 인성교육의 요체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지니는 성질이 인성이며, 인성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 곧 공감의 능력임에 틀림없다.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실력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개인적 차원의 정직과 용기, 사회적 차원의 배려와 나눔은 충분히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감은 막연한 감성영역으로 생각된 적도 있었지만, 공감이야말로 ‘함께’하는 능력이고, 서로의 진정성이 통하는 소통능력이다. 공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하고, 소통은 서로서로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야 가능하다. 좋은 인간관계, 나쁜 인간관계는 결국 공감과 소통의 문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의 문제이다. 공감과 소통능력을 기르면 함께 어울려 사는 능력이 함양될 것이며, 정직과 용기, 배려와 나눔도 결국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능력이 잘 갖추어지면 다른 인성요소도 더욱 잘 다듬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감과 소통이야말로 근본적인 인성요소이다.

공감과 소통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음악, 미술, 체육, 독서와 같은 심신활동은 함께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교육활동이다. 예술활동은 예술가와 예술세계, 예술가와 청중, 그리고 청중과 예술세계와의 공감과 소통의 기회이며, 음악과 미술은 메시지를 전달



하는 소통의 언어이다. 미술과 음악은 정신세계와 공감능력을 확장시켜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며, ‘혼자’가 아닌 ‘함께’의 정신이 바탕인 운동을 통한 스포츠맨십의 발휘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고전을 통해 선인을 만나며, 예지력이 담긴 글을 읽으며 미래와 대화할 수 있고, 책 속의 인물과도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활동은 친구는 물론이고, 부모, 교사 등과 함께 학교, 가정,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이었던 선비들은 자연과 벗하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가무와 씨름을 즐기기도 하며 넓고 크며 올바른 기운을 마음에 가득 채웠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음악, 미술, 체육, 독서와 같은 심신활동 등의 정서적 접근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들은 항상 이루어져 왔었으나 그동안 우리 삶에서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저 삶을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서 부수적인 내용들일 뿐이었다.

VI.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출범을 환영한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아까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했다. 이미 일상화되어 버린지 오래된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고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학생자살사건은 연이어 보도되었고 그동안의 무관심과 무대책은 정부와 학교는 물론 사회와 어른들의 엄중한 책임으로 돌아왔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범부처가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섰다. 2012년 2월 6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적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총리주재 협의체로 발족되어 그 첫 회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자 모든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정비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가동하였고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졌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은 더 컸고 하루 평균 한 명꼴로 보고되어 온 청소년 자살 또한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현장과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학생들도 종전보다는 신고편의성이 높아짐으로써 눈에 띄게 학교폭력 발생 현상은 누그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발생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일이며 그것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사회 일각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주문되었으며,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한민국 교육의 진로에 엄숙한 진단과 고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 수립과 관련된 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국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2012년 3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12대 정책과제연구팀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정책연구팀은 2012년 4월 7일 인성

교육정책연구팀의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수차례의 워크숍, 서베이, 텔파이, 연구세미나 등을 통해 인성교육 비전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인성교육 실천 문제가 정부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인식 하에 18만 회원교사는 물론 교육계의 염원을 모두 모아 정부와 함께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실의 하나로 2012월 5월 25일 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하고 “인성교육 이제는 실천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60여개 인성교육 관련단체와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인성교육실천포럼은 교과부가 발주하여 추진한 인성교육정책연구팀과 협력하여 2012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범사회적 범국가적 인성교육 실천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2012월 7월 24일 마침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발대식과 세미나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인실련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인실련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사회,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벌여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인실련에

거는 기대가 많지만 그 성공은 역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 즈음에서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 및 인성교육의 실태를 살필 수 있는 지표 및 검사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전체적인 인성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인성수준을 경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학생의 인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과 확장 덕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인성중심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총체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학생, 일부 교과보다는 전체 학생, 전체교과, 지식위주보다는 체험 등 실천위주, 과정과 더불어 결과와 결부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운동을 위한 사회적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경제계, 종교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정부와 협력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캠페인 전개,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비전관리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일을 담당할 센터가 필요하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은 이러한 전문적 추진체제로서 가장 믿을 만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인실련의 성공에 많은 기대를 해본다. 



위기의 아이들 80만 명, 현황과 대책

글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급변하는 사회분위기와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신적·물리적 고통은 그 종류와 정도 측면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만한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학업중단, 가출, 약물남용 등 위기상황의 학생들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들 위기청소년 문제는 국가가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되기에 이르렀다.



I. 위기의 실태

위기는 개인의 현재 자원과 대처 기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갑작스럽고 예견하지 않은 충격적인 단일 사건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경험을 통해 정서적 충격을 갖게 되며,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없거나 대처방식이 붕괴에 직면할 때 위기를 경험한다. 그래서 위기는 붕괴에 대한 공포, 충격, 고통의 감정을 뜻한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로 끝나며, 일반적인 선택이나 행동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 나아가 이는 개인의 생의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전개되기도 한다. 아직 성장발달과정 중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해결할 수 있는 대처능력의 부족, 경험 부족,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성인보다 위기에 취약하며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극단적인 해결책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상담원 통계에 따르면 자살이나 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학생의 숫자는 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이 점차 다양화, 집단화 및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전국 139만 명 학생 응답자 가운데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

력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53.6%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초·중·고교생 7만 여명을 조사한 결과, 약 1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및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증상을 겪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음주, 흡연, 약물, 비행,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정서·행동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정과 부모의 기능 약화로 인해 청소년 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아동 학대 비율이 80%를 넘는 등 학생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제공해야 할 가정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의 유해 매체 이용 경험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해업소의 출입 역시 증가추세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5세-9세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7.9%로 만20세-49세 성인 중독률 6.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0세-19세 청소년 중독률은 10.4%이고, 이 가운데 고등학생은 12.4%로 가장 높은 중독률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13.0%, 다문화 가정은 14.2%, 한부모 가정은 10.5%로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소년의 중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의 보호 속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퍼져 있는 다양한 유해환경이 학생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이탈 학생과 다문화가정의 학생 등으로 학생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교육격차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유형의 위기학생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위험군 학생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II. 위기학생에 대한 원인 진단

위기학생의 증가는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학생 증가에 대한 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진단해 보았다.

1. 학생 정신건강 약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아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 우울, 자살 등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8.6%)'로 나타났고 이들 중 8.8%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의 이유는 성적 및 진학문제(53.4%)로 응답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이 무려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초·중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에 비해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료와 연계할 필요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상

담이나 치료를 권유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학생은 방치된 채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왜곡된 편견을 바로잡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한 선별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신건강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원 등의 배치를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관리해야 하며 학교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소외되는 학생 없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관련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가정 위기의 심화

우리나라 가정의 위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통적 가정의 구조적 해체이며 가족기능의 상실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정보화사회의 급진전에 따른 세대 간 격차로 가정의 위기 실태를 진단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양극화와 빈곤, 가족해체가 급증하면서 빈곤가정,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조손가정 등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가정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구조적, 기능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경제위기로 인해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비빈곤층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친구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물질 스트레스가 높으며 무관심, 무흥미, 자살 충동과 같은 우울 정서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한 부모 결손은 자녀의 성격형성 및 사회적응에 있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적응문제와 공격성, 불안, 과잉 행동 등을 나타냈다.

3. 학교폭력의 증가

학교폭력은 위기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원인은 크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생물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전두엽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조절과 공감에 취약하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정서적 공감능력 결여와 함께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를 입거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정서적 결핍이 생기면서 충동성 조절능력이 결여되는 것도 폭력성이 생기는 주요 이유다. 공감능력과 충동성 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면 학교폭력 가해 행동이 발현된다. 공감능력은 공감 받는 경험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성적은 최대의 관심사이지만 감정, 정서는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감 받지 못한 아이들이 공감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유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들에서 부적절한 가정환경이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갈등,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 부모의 성향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및 정서와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부모의 돌봄기능의 약화, 인터넷, 게임 산업의 증가

등 사회의 다양한 유해환경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추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밀한 학급과 학생 수, 폭력행위를 유발하기 쉬운 학교 건물, 인성교육의 부족, 지도력의 부재 등 이러한 학교의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는 학교 주변의 불량주택지, 빈민가, 오락실,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퇴폐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청소년 유해환경 확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과 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해환경 접촉에 앞서서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 유해행위 등 모든 유해환경의 노출은 어른들과 관련되어 있다. 가정의 위기는 청소년들에게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앞장





서서 막을 수 있다.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붕괴된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이용하려는 성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성인들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다문화가정 학생 문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중도입국가정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농촌사회 구성원이거나 도시 저소득 계층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영유아기 때 원활한 언어자극이 부족하여 언어발달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업수행에도 영향을 주어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정체성 형성 및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낮은 자아개념, 높은 우울, 불안 등 다양한 내재화 문제를 가질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 등이 우울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수록 우울 및 불안 점수가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 애착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나 이주여성인 어머니와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이 다양한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위기학생 대처를 위한 정부·가정·학교·사회의 노력

위기학생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여 노력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위기학생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가정·학교·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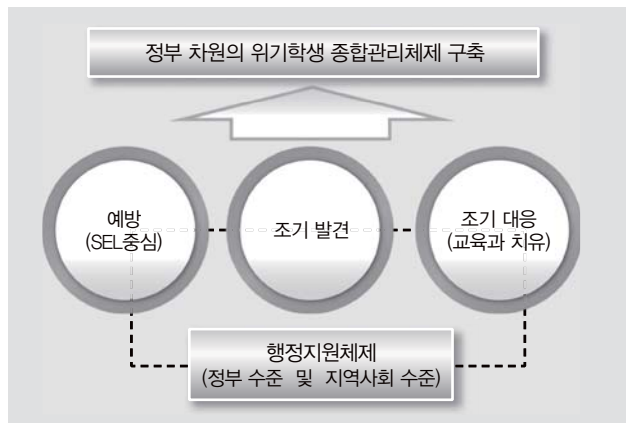
1. 정부차원의 위기학생 종합관리체제 구축

정부차원의 위기학생 종합관리체제 내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프로그램 강화의 측면과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강화 두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 프로그램은 학교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의 평가나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며 위기학생 특별 프로그램은 위기학생으로 선별된 학생들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선별, 처방과 치유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개인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학부모와 학생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위기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위기학생 실태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위기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유형에

따른 지원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위기학생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할 가정의 붕괴로 인한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적응 상 다양한 문제와 연관된다. 빈곤, 이혼, 실직, 폭력 등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1] 위기학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가. 예방체제 : 사회성 · 감성학습(SEL :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중심

위기학생 문제 대처 시 문제 중심적, 반응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적인 차원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위기학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의 위기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 · 피해 학생 뿐 아니라 주변인(방관자, 동조자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보급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

로그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학교폭력 원인의 수준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단위학교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사회성 · 감성학습(SEL :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민간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및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수준의 효과성이 입증된 사회성 · 감성 학습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학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다.

나. 조기발견

읽기 장애, 우울, 불안 등 정서 · 행동발달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가정에서 발견하고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많은 원인이 이러한 발달장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기 개입과 치유가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도구, 위험군으로 걸러진 학생들에 대한 상담인력 확보, 치료기관으로의 연계 등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정신건강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방치되거나 더 악화되지 않고 교육적인 처치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검사의 경우 양적 측정도 중요하지만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진단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차적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 조기대응 : 교육과 치유

위기학생을 선별한 후에는 위기수준에 맞게 조기에 이들을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처치는 크게 교육적인 대응과 치유를 위한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학생,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이나 치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청 수준에서 주도적으로 특별교육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질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Wee 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특별교육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Wee 센터는 직접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보다는 지역의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기능이 개편되어야 한다. 정보를 관리하여 교육이나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선별검사 결과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외부기관과 연계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져 상황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Wee 센터 상담인력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적절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인력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문제 해결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치유를 위한 기관은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대안학교, 병원학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Wee 프로젝트 내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자원들과 이 Wee 프로젝트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와 연계하여 위기학생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행정 지원 체제 : 정부 수준 및 지역사회 수준

행정 지원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 체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학교폭력 취약학교, 정신건강 위험군이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학교에 Wee 클래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수요에 따라 Wee 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고 Wee 스쿨을 확대하며 우수 운영 사례들을 보급하고, Wee 스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질을 높이며 고위기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장단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가정·학교·사회의 역할 강화

가. 가정의 역할

위기학생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위기의 가정을 위한 지원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을 가장 먼저 관찰하고,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과 접촉 시에 제지하는 것, 그리고 심각한 위험이 보일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 또는 정부 기관들이 나서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학교의 역할

위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학교의 분위기를 안전한 곳으로 바꾸고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며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신장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 교육(토론)연극 등의 문·예·체 활동을 통한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비폭력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원 연수 기회 확대로 생활교육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문화 개선, 문화예술교육 확대, 학생 자치활동 지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학교부적응 학생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 교육(지역사회 기관 연계), 한 부모, 조손가정 등 특수상황에 있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 지원, 입시 설명회 뿐 아니라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학생 지도를 위해 부모와 연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 사회의 역할

부모와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이 필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놀이문화 확대, 가족문화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또한 청소년

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유해매체나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게 하고,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IV. 나가며

위기학생이란 어느 특별한 집단이 아니고 위기의 유형, 발달단계, 위기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집단이다. 적절한 개입이 없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기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취학 및 입학 시 학생 개인의 위기로인을 진단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상담을 통해 상시적 위기학생 진단체계를 가동하여 한 명의 위기학생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학생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위기학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기학생 문제 대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 이전에 조기진단과 조기개입의 예방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매년 학교별로 ‘위기학생 자가진단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의 위험성이 높은 학교, 위기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학교는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문상담, 대안적 교육(특수학급 및 위탁교육 등) 및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때 위기학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구상

글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언 :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재정

반값등록금 논쟁으로 촉발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금년 말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당 차원의 관심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보다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으나, 2012년 8월 23일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새누리당의 관심도 반값등록금으로 모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논쟁은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관심을 한쪽으로

몰고 가면서 고등교육 재정의 현실을 간과한 채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초점을 맞추으로써 정작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나 고등교육 재정의 총량 규모가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값등록금 논쟁이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논리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대학예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즉 대학교수 보수가 지나치게 높고, 대학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등록금이 비싼 것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조조정,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의 설립자인 국가나 사립대학 설립자인 학교법인이 대학교육비의 상당부분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학교법인이 설립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대학교육비를 학생에게만 전가해왔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싼 것이므로 국가와 학교법인의 부담을 늘려 각각의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셋째, 대학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보통교육이며, 대학교육의 수익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미치므로 대학교육비도 학생만이 아니라 사회도 분담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늘려 대학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논리 모두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나 고등교육 재정의 총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낮추되,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반값등록금 주장에는 현재의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대학교육의 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대학교육의 질을 논하면 등록금 인하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 논쟁을 잠시 보류하자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논쟁을 떠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IMD 평가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59개국 중 22위이고, 교육경쟁력은 31위지만,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은 42위(2011년은 39위)에 그쳤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만족도로 측정하는데, CEO급 기업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져 나온 대답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 순위가 낮다는 것은 기업인이 대졸자의 교육수준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기업들의 대학교육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대학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통해 대학교육의 거품은 이미 제거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계속된다면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주장의 본질이 등록금 부담완화로 본다면,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고 등록금 부담만 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등록금을 누군가

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학교법인이 추가적으로 대학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고 재산의 수익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분을 흡수할 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부금 확충을 통해 대학등록금 인하분을 흡수하는 방안도 기부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전망이 밝지 않다.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음으로써 등록금 인하분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사업비는 특정 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고, 등록금이 결정되고 예산편성이 완료된 뒤에 사업비 지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비를 예상하여 등록금을 낮추기는 어렵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모든 학생이 등록금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학금이나 사업비와 같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명목등록금을 낮추기 어려우며, 교부금처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상비를 대학에 지원할 때 명목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명목등록금이 아닌 전체 등록금 부담액을 낮추는 방안으로, 일부 학생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차등 지원하여 대학이 아닌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등록금 부담이 과중한 것은 사실이므로, 현재보다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명목등록금이든 실질등록금이든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등록금 부담을 낮추되, 명목등록금 인하와 실질등록금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통해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고, 동시에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용자제도를 개선하여 소

득계층별로 차등 있는 장학금과 학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제도 개선이라면 결국 정책의 초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로 모아진다.

II.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대학교육비 결산 현황을 보면 분명해진다. 2010년 결산기준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세입결산현황(〈표1〉 참조)을 보면, 국립대학은 국고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고, 사립대학은 등록금 비중이 가장 높다. 국고보조금 비율을 설립별로 비교해보면, 국립대학은 세입결산액의 48.5%에 달하지만, 사립대학은 12.3%으로 국립대학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반면, 학생 등록금 비율은 국립대학 23.7%, 사립대학 51.1%로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의 2배 이상이었다.

〈표1〉 2010년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재정수입 구조 비교

(단위 : 억원, %)

국립	구분	국고보조금		기성회비	발전기금	이월금	기타	계
	수입액	37,225	15,493	1,430	12,646	9,987	76,781	
비중(%)	48.5	20.2	1.9	16.5	12.9	100		
사립	구분	국고보조금	법인전입금	등록금	기부금	교육부대·외수입	기타	계
	수입액	31,983	14,256	132,708	4,893	21,660	54,194	259,694
비중(%)	12.3	5.5	51.1	1.9	8.3	20.9	100	

주 1) 국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율이 약 85%이므로 국고보조금에 수입료 2,734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한다면, 국립대 연간등록금 규모는 18,227억원(수입총액의 23.7%)으로 추정됨.

2) 국립대학의 경우,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통합 수입구조 기준(4년제 국립대학 39개교 대상)

3) 일반대학,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전문대학(원격대학 제외)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내부자료

국립대학 국고보조금 속에는 학생등록금 중 수업료 납부액 (약 2,734억원으로 추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 하면 국고보조금 비율은 45.0% 정도로 볼 수 있다. 국립대학 국고보조금은 국립대학 설립자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과 고등교육 관할청으로서 고등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립대학 설립자로서 국가도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비율만큼(5.5%)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국가가 국립대학 진흥을 위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39.5%라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 세입결산액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12.3%인 반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전입금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을 합하면 17.8%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주로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 설립자로서의 역할을 떠나서 고등교육 관할청으로서 지원하는 국가재원이 국립대학에 편중되어 있어서 국립대학은 학생으로부터 등록금을 많이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 관할청으로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의 설립별 차이, 즉 국립 39.5%와 사립 12.3%의 차이인 27.2%가 바로 설립별 등록금 의존도의 차이, 즉 국립 23.7%와 사립 51.1%의 차이인 27.4%를 만들어내고 있다.

설립별 국고지원의 차이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에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와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한 재원 규모는 8조 6,052억원으로 추정된다.¹⁾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한 재원규모는 6조 7,722억원이다.²⁾ 지원된 재원을 설립별로 구분해보면, 국·공립

대학에 60%가, 사립대학에 40%가 지원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지원비는 국·공립대학 1,041만 6천원, 사립대학 235만 3천원으로 국·공립대학 재학생이 사립대학 재학생의 4.43배를 지원받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고등교육 지원이 국·공립대학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사립대학 등록금이 비싼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과도한 적립금 적립, 세출예산 뺑뺑이 나 학교법인의 법인전입



1)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등교육재정 지원규모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R&D 지원이나 각종 위탁사업비 지원과 같은 교육재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2)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예산의 고등교육부문 예산규모인 5조 131억원보다 많은 것은 교육분야 평생직업교육부문 예산과 과학기술분야 예산에서 대학으로 지원된 R&D 재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금 회피 등이 아니라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을 국립대학에 편중 지원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가 사립대학에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면 국·사립 간 극심한 등록금 격차도 나타나지 않고, 반값등록금 주장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표2〉 2011년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현황

구분	학교 수	재학생수(명)	지원금액(천원)	비율(%)	학생 1인당 지원액(천원)
국·공립	57	495,808	5,164,339,139	60	10,416
사립	347	1,462,015	3,440,840,474	40	2,353
계	404	1,957,823	8,605,179,613	100	4,395

주: 1) 대학 및 전문대학에 실제 지원된 금액 기준
 2)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직업학교 제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2), 고등교육재정지원 정보시스템 2011년 사업 결과보고 자료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설립기준이 똑같다는 의미이며, 대학설립자의 책임과 의무도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학교법인이든 똑같다는 의미이다. 다만, 국·공립대학의 설립자에게는 어차피 세금으로 대학운영비를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요구했다면, 확보기준은 학교법인에게 요구한 기준과 똑같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설립자로서 지원해야 하는 학교운영비의 최저기준은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에 해

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연간 3.5% 수익 필요)을 갖추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의 80% 이상(연간 2.8%의 수익)을 대학으로 전출하면 설립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즉, 대학설립자는 대학 운영수익의 2.8%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비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한 고등교육의 진흥 책임은 잊어버린 채, 국·공립대학에만 법정기준 2.8%보다 현저히 많은 설립자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설립자로서 설립한 대학에 법정기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인 지위 중 설립자로서의 지위에만 치중하는 것이 문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로서의 지위와 교육진흥자로서의 지위 중에서 진흥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설립자로서의 지위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 여기서 제도의 문제란 고등교육 재원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 일반회계 재원 속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직원과 같은 신분의 교과부 국가공무원이 당연히 국립대학을 더 지원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로 확보되는 고등교육 재원은 사립대학을 위한 재원으로 분리되어야 국립대학 편중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Ⅲ. 설립별 편중 지원을 해결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은 확대되어야 하고, 국고지원 확대의 대상은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재원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국고에 고등교육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해도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 사립대학으로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다. 일반회계 속에 들어 있는 재원은 당연히 구조적으로 국립대학에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하여도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로, 국고지원 확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재원확보제도이면서 재원배분제도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고등교육 재원 중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성격에 부합하는 재원을 전환하고,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국립대학 경상운영지원비, 국·공·사립대학 재정사업비,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교수 등에 대한 연구비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대학 경상운영비는 국립대학 설립자로서 지원하는 재원이므로 고등교육 진흥자로서 지원하는 재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이치와 같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항목은 국립대학(서울대, 울산과기대 포함) 경상운영비(2조 6,149억원), 대학교육 역량 강화(9,254억원), 학술연구 역량 강화(3,205억원), 사립대 교원 국가연금 부담금(2,440억원), 한국사 연구 진흥(272억원), 차관 원리금 상환(171억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2,802억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2조 833억원) 등 6조 5,126억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따라서 국립대학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3조 8,977억원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전환대상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부족하므로 대폭적인 재원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수입액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듯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재원을 칸막이 하는 데 따른 예산부처의 저항과 재원을 확충하는 데 따른 다른 부처의 저항이 커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 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저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저항이 적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한 후, 고등교육세율을 인상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2년 교육세 예산액은 4조 7,696억 원이므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50% 인상하여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고등교육세 확보 규모는 7조 1,544억 원이 된다.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결손을 초래할 경우, 초·중등교육 재정의 부실은 물론 교육계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육세

에 해당하는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가져와야 하는 바, 기존의 고등교육재정사업비 재원과 교육세 재원의 차액이 문제가 된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국·공·사립대학 재정사업 재원은 3조 8,977억 원이며, 교육세 예산은 4조 7,696억 원인 바, 차액인 8,719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고등교육 재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경우, 교육세 예산 4조 7,696억원을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대신 교육세 수입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올리면 현행 20.27%보다 2.87%p 늘어난 23.14%가 될 것이다. 반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목표인 7조 1,544억 원은 기존의 교육세 예산 4조 7,696억원(고등교육재정사업재원 3조 8,977억원과 일반회계 증액분 8,719억원의 합산액), 고등교육세율 인상분 2조 3,848억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여기에 국립대학 일반회계 재원 2조 6,149억원을 합하면, 고등교육 재원 규모는 9조 7,693억 원으로 내국세의 5.88%에 해당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고, 보통교부금은 고등교육세 수입액의 60%를, 특별교부금은 고등교육세 수입액의 40%를 재원으로 하되, 보통교부금은 사립대학 교원 인건비 지원과 등록금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지원하고, 특별교부금은 고등교육재정사업(국·공·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수요는 사업별로 산정한 후, 총액으로 교부하고 사업별 성과를 다음 연도에 교부하도록 한다. 교부금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설계할 경우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인정여부,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여부, 일정 기준의 교수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교부금 수급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외에도 그동안 교육계는 국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대학교육비 공제제도 개선, 국가장학금 확충 및 학자금 이차보전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으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도입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고등교육 재원 총량 규모의 증가없이 재원부담 및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인 경우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표3〉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개편한 전과 후의 비교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재원명칭	금액	재원명칭	금액	비고
지방교육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 (내국세 20.27%)	336,7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 (내국세 20.27%)	336,7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분 (교육세 전액)	47,6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 추가 (내국세 2.87%)	47,696	국·공·사립대재정사업재원 3조 8,977억원에 일반회계 재원 8,719억원을 증액하여 가산
	계	384,473	계	384,473	내국세 23.14%
고등교육재원	국립대경상운영비	26,149	국립대경상운영비	26,149	국립대학법인 포함
	국·공·사립대 재정사업 재원	38,977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세)	47,696	교육세 수입액 이전
	계	65,126		23,848	고등교육세 세율 50% 인상 또는 추가 세원 발굴
	계	65,126	계	97,693	내국세 5.88% 해당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라는 재원 확충 및 배분의 틀을 먼저 구축하는 일이다.

IV. 결어

확보해야 할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다다익선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확충목표를 높이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해서 모든 재원을 정부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법인은 설립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학 스스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별도 수입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있으므로, 가장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길은 제도적으로 국가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국가지원을 늘리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려면,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학교육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운영이 방만하다는 막연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교육의 성격이 엘리트교육에서 보통교육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10여 년 전부터 제안되었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좌담회 : KEDI · SBS · 대교협 선정, ‘100대 좋은 대학 강의’ 수상자 5인의 강의비법



김찬주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

김철중 : 홍익대학교 교수 / 재무관리

김희준 : 서울대학교 교수 / 자연과학의 세계

이명학 :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한자와 한문의 세계

이창재 : SBS 미래부 차장

조정원 : 제주대학교 교수 / 에듀워터

최정윤(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사회)

“강의비법? 어떤 계기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내 강의의 초점은 이거다’에 대해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사회) : 수상 이후 강의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주변 분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요?

김철중(홍익대학교 교수) : ‘이제 강의도 밖에서 평가하구나’ 라는 외부의 반응들을 받았습니다. 또, 그걸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같은 과라던가 전공의 경우 가능하지만 전공도 다르고 부문도 다른데 어떻게 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시더라고요. ‘같은 학교에서 두 번째 수상자는 나오기 어렵겠네’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희준(서울대학교 교수) : 염려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이 나온 시간이 많은 시청자가 있는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점.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어서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상을 받고 나니까 후임자들이 제 자리로 들어오기를 꺼리더라고요. ‘맡은 과목을 어떻게 유지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천과정에서, 아마도 숨어 있는 좋은 강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발견해 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에 연락을 하거나 추천을 해서 받은 강의일 텐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는 적으니까요.

이명학(성균관대학교 교수) : 제가 수상은 했지만 왜 수상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상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았고, 이런 평가 때문에 수상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제가 왜 수상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방송을 해주시는데, 방송이라는 게 흥미와 재미, 시청률로 결정되니까 저희가 강의를 해서 상을 받은 것은 학생들에 의해 받게 된 것이지 학생들을 즐겁게 해서 받은 것은 아닌데 일방적으로 SBS에서 주제를 ‘부부’로 하라고 하니까 저는 과거에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제가 ‘부부’에 대해서 알고 있나 싶고, 제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였는지도 확신은 없는데 아내 옆에서 이런 방송을 보고 있으면 자괴감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방송이 제가 상을 받게 된 이유가 학생들의 강의평가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일 텐데 그런 부분을 일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이 무엇이라고 했길래 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활자로 보여줘야 시청자들도 ‘아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다년간 평가를 받았구나’해야 하는데 특강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즉흥적인 대답처럼 보이는 것이 아쉽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대답을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김철중 선생님이 시장에서 강의하시는 거 보면서 판을 올려놓고 강의하시는 거 보면서.. 방송에서는 경제·경영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인 건 알겠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부부’라고 정해줬는데 누가 옹니까? 제자들이 옹니까?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참..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하는 걸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재(SBS 미래부 차장) : 제작 당시가 방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방학이라서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준비하다보니까.

김철중 : 다른 교수님들이 평가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참고할 만한 점이 뭐가 있을까? 티칭방법이라든지, 다섯 분들이 나와서 한다고 했을 때 교수들 입장에서 각 분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나 내가 배울 게 있나 하는 건데, 막상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저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아닌데 저게 포인트가 맞나? 어떻게 보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에 부합하는가? 처음이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잘 맞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교수들의 관심은 내가 좀 참고할 것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title은 '대학의 100대 명강의'라고 해놓고 내용은 그렇지 못 했던 거 같아 아쉬워요.

이명학 : 각 대학에 보면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번에 수상하지 않으셨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라고 하니...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제소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다', '노숙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부부'로 하라고 하셔서 아쉬웠어요.

최정윤 : 사실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느냐 라고들 하셔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추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원(제주대학교 교수) : 일단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거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사람들에게 남길 것이냐 라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보다는 강의자 저 자신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강의 포맷이나 내용보다는, 그게 방송에서의 조명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네 분은 일인 강의라는 것에서 강의=강의자로 선정이 되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0대 명 강의를 뽑은 건지 100대 명교수를 뽑은 건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착각도 되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이 넘는 교수진이 있고요. 주제에 따라서 교수진이 바뀌죠.

최정윤 :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느냐'에 대해 많이 물어보셔서... 그 평가에 대해 시작한 강의 자체였어요. 강의를 선정할 때는 교수법이나 수업컨설팅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 함께 하였고, 좋은 강의를 선정하기 위한 원리를 선정하는 것은 공동연구진들께서 가이드를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의 포커스는 강의였지만, 강의자가 그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술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두려고 한 부분은 수업이었어요. 강의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강의자가 기준이 되어 이끌어가는 수업이라는 덩어리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법, 열정이 가장 중요하구요, 학생들의 평가(intensive)를 간접적으로 수업 콘텐츠를 보았고, 학생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1차 선정이라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선정이라서 강의 자체를 담지 못한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희가 1차로 선정한 교수님 다섯 분은 남다른 열정과 교수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선정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특강쪽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는... 저희가 평가라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200개 강좌 정도를 모았고요, 나름대로 학문분야와 전공/교양, 학생규모로 그룹핑을 해서 경쟁을 통한 선발을 한 것



김철중

홍익대학교 교수/ 재무관리

“학생들이 티칭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education을 원하는 거죠.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가치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지 몰라도 학생들은 그런 needs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 그래서 본질적 강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김희준

서울대학교 교수 / 자연과학의 세계

“학생들은 보통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적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자신의 지적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초점입니다.”

입니다. 김희준(교양/자연/대규모)교수님의 경우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었고요, 그 강의들을 많이 고민한 결과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방송을 했을 때의 콘텐츠와 강의가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선정 과정에서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명학 : 일요일에 하시는 방송을 계속 하시려면 이때 선정과정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중 : 선정하시는 분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같아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방송에서도 본래 목표하신대로 대학교육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명학 : 심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게 왜 선정되었나’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일요일 방송이 주중방송과 같은 맥락으로 가다보니까...

최정윤 : 강의비법? 어떤 계기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내 강의의 초점은 이거다’에 대해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희준 :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오래 살면서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division of continuing education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겨서 처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니까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젊은 분들까지 공부하는데 일반적인 우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당시가 막 우주의 생성에 대해 재미있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던 터라 일반적인 강의를 하지 않고 흥미로운 강의를 선택해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학생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옆에서 느끼게 하고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터득해서 재미를 느끼게 하기, 중요성 깨닫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15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보통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적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자신의 지적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초점입니다.

김철중 : 저는 뭐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업에 종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파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나중에 학교에 간 다음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잘못했는데, 지식전달에만 초점을 두다가 언젠가 한번 미국의 제 전공분야의 약간 실무oriented 된 강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좌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논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 논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틀테면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접하잖아요 삼성과 애플의 싸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본질이 뭐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업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매력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한 공부를 하게 하고 발표를 하게 하

는 수업을 하게 합니다. 그 발표를 하는데 팀에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라서 본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최정윤 :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강조하시니까 다음 강조는 어떤 식의 이야기가 될지를 말씀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김철중 : 저는 '호모사피엔스'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강의에서 '호모나란스'쪽을 이야기하게 하는, 그래야 소통도 이루어지고 상대가 아는데 무언가 하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말을 함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정리만 해주면 되지 않나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자기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와서 주고 받는 것

이명학 : 예의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수는 학생에게 학생은 교수에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 교수는 강의시간에 들어와서 성심성의껏 강의하고 학생은 그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라고 말하죠. 제가 강의평가를 받아보면 참 의아스러운 것 중 하나가 사실 교육은 지식전달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사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사람 만드는 것을 얼마나 하고 있는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한문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강의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뻔합니다. 부모한테 잘해라 친구들에게 신의를 지켜라 약속 잘 지켜라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줘라 내가 좀 희생해라. 이러한 평범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강의평가서에 쓴다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럼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워요.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저는 실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김철중 : 우리는 대학강의여서요. 학생들이 티칭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education을 원하는 거죠.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가치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지 몰라도 학생들은 그런 needs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 그래서 본질적 강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조정원 : 저는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이 취업과 관련되는 것에 약간 반대입니다. 관련업체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어도 다시 재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이 취업을 위한 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교육관이거든요.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강사가 리딩을 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리딩을 하면서 교수자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주문화컨텐츠라는 인재양성사업을 7-8년 동안 진행해왔어요. 대학에서 전문가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자는 의도였죠.



조정원

제주대학교 교수/ 에듀워터

“우리는 우선 강사가 리딩을 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리딩을 하면서 교수자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에서 전문가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자는 의도였죠.”



김찬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외워야 되는 지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학생 스스로 깨달으면 저는 학생 스스로 지적 호기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기존의 프로젝트는 교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획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아이들이 그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게끔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층이 조직이 되고, 매주 매일 아이들과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지 말고 ‘이 길과 저 길 중에 어디로 할까요’를 물어라고 합니다.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에듀워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문화라는 문화원형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을 컴퓨터 디자인 학생들이 하고 원형발굴은 사학과 아이들이 하는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죠. 이렇게 그룹이 되면 무임승차가 꼭 나와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갈등하고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은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의 평이나 나중에 와서 해주는 이야기들, 밖에 나가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좋죠. 저고 PBL이나 액션러닝을 알고 이런 것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듣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찬주 : 첫 번째 반응은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방송 전에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전날 강의준비를 하면서 밤을 샜는데 최악의 조건에서 방송을 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보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지금도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하구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교양과목인데 사실 학과에서 하라고 해서 맡게 된 건데 본래 잘해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든지 이 과목이 폐강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본래는 걱정이 돼서 한 거죠.

제가 이 과목을 맡음으로 해서 사라지지 않을까 과목성격이 제가 있는 곳이 여대고 과목이 물리학이고, 여학생들은 과학을 싫어하고,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도 않고, 이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한 거죠. 처음 준비를 할 때는 한 시간(90분) 강의를 하는데 48시간이 걸렸어요. 그 학기에는 다른 것은 거의 하지 못했고 그 강의만 준비한 거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한 학기가 어떻게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과목 준비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지적 호기심을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학생들은 필요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닌 오로지 학생들이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 잘보고 하는 이유는 대학 잘 가고 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 잘 들어가는 것에 목적을 둔 것 밖에 없으니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필요라기보다는 주변에 의해서 밀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재미나 흥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오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탈진한 상태로 대학에 와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인간 본연의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알아가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생기고 과학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외워야 되는 지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학생 스스로 깨달으면 저는 학생 스스로 지적 호기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중요한 거다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새삼스럽게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놀라움이 좋은 강의 평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최정윤 : 요즘 해외 우수 대학에서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학 : 저희 대학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말을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공개하는가,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흥미에 따라 보는 혹은 국민 교양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철중 : 제 생각은 focus를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가할 의사가 있나. 둘째, 우리나라 교육제도라는 게 모든 걸 다 참아야 하잖아요. ‘대학에 가서 놀아라’, ‘대학에 가서 여자친구 만나라’ 담배, 술도, 학생들의 생각도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없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전달해주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학이 저렇게 멋진 강의도 하는구나, 대학도 공부를 하는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는 사회과학이 잘 맞는다는 식으로 안내자 역할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나 셋째, 일반 대중들한테 필요한 지식들을 알기 쉽게 녹여가지고 제가 시장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생일대의 최악의 상태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저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좀 다른 일반 국민들인데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나중에 방송이 끝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숫자에 밝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파악을 해야지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명학 : 전체 한 학기 강의가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1시간 정도의 강의를 올려놓는 것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전체 강의는 16주인데 50시간에 맞춰진 강의를 하는 게.. 전에 teaching reward를 받고 나서 학교에서 1시간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강의를 해서 오픈을 하는 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최정윤 :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 변환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원가 방침을 두는 것 같다는 변화를 느끼시는지?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명학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한자와 한문의 세계

“저희는 teaching award 라는 것을 교수실 명패에 달아줘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응모를 받아요. 내가 들은 강의 중에 좋은 강의를 에세이 응모를 받고 이걸 책을 만들어서 교수들에게 나누어주거든요.”

김희준 : 이렇게 시상하고 선정한 게 처음이니까 당장 느끼는 것 같아요

김수경 : 대학의 시간강사제도와 같은 것 때문에 곤욕스러운 점들이 있는데요. 교육전담 track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즉, 강의전담 교수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폭 늘려야 하지 않느냐.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년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셔서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한양대처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준 : 저희 대학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일부를 강의전담으로 뽑아서 한다는 의미라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진을 할 때 산출 논문을 기준으로 하는데 누구는 논문 안 쓰고 강의만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reward를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6개월 후에 정년퇴직하면 광주과기원으로 석좌교수로 가기로 했는데, 저는 가서 연구보다는 순전히 학부교육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명학 : ACE사업을 피부로 느끼냐? 못 느끼죠. 그전에는 교수학습센터에서 교수기법에 대해서 배우라는 공문은 와요. 그런데 교수가 얼마나 자기고집이 강한데, 그런 곳에 갑니까?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최정윤 :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교육 쪽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이명학 : 저희는 teaching award 라는 것을 교수실 명패에 달아줘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응모를 받아요. 내가 들은 강의 중에 좋은 강의를 에세이 응모를 받고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교수들에게 나누어주거든요. A4용지 3장을 쓰니까 꽤 써요.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철중 : 사실 학교에서는 강의에 대한 포상이 별로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과목이 폐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다거나 사명감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책당국하고 연계를 시켜서 뭔가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에서 이런 것을 reward를 주는 시스템을 평가해 준다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평가라는 말을 싫다고 하셨는데 사실 평가에 대학들이 많이 신경을 써요. reward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건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찬주 :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통의 교수가 강의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현재 시스템에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현 대학교육 시스템 안에 학교는 교수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강의는 들



어있지 않고 논문을 몇 개나 쓰느냐와 같은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선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강의에 교수가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게 되구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강의에 신경을 쓰는 건 어렵다는 거죠. 특정 몇몇 교수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거죠. 예를 들어 학생강의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할 때 강의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이 교수가 문제가 생겨서 승진을 안 시키던지 잘라야 할 때 쓰는 도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평가와 연계를 시켜서 '강의를 잘하면 자기의 삶이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는 한 강의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정원 :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교육사업을 해온 거거든요. 교육역량 강화사업같은... 모든 것을 정량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에 취업률이 몇십 퍼센테이지씩 향상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량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교육을 너무 단기간 내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강의평가의 경우도 그 평가방법이 강의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이 필요하다고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강의의 경우 정말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학점을 따기 쉬워서일 수도 있거든요 즉, 정량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명학 : 제가 교무처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평가방법에 10가지 항목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학생들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이 강의를 추천할 수 있나?'를 묻는 게 낫다는 거죠. 평가방법이 너무 객관적인 것도 그렇구요.

김철중 : 제가 볼 때 KEDI나 SBS에서 좀 상징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의도 평가하네'라든지, '새로운 이야기다'에 대한 반응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서는 사회과학의 경우 현실과 굉장히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구 없이 강의만으로 tenure track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World Education



글

•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교시설 업그레이드, 해외사례를 통해 배운다

I. 들어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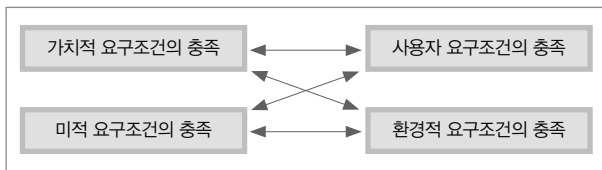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이후 '70년대까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무교육 확충 5개년 계획 등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과밀학급, 과대학교, 2부제 수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시설의 양적 확충 시기였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라는 학교시설 기준을 제정하고, 농촌형과 도시형 등 표준설계도를 보급하였다. 이후 1990년대까지는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교육재정이 확대되고, 5·31 교육개혁, 제7차 교육과정, 열린교육 등의 정책도입을 위해 과거 양적 확충을 위한 획일적인 학교시설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로 인해 표준설계도가 폐지되었고,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개정되면서 학교건축의 다양화와 현대화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학교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건축적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학교건축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발전과 함께 학교건축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건축의 성장과 발전 속도보다는 학교건축의 질적 향상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교건축은 일부 교육청 관계자와 건축가 등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여하여 제한된 예산과 시간이라는 여건 속에서 쫓기듯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학교건축은 다른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미래사회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 장소인 만큼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을 하는 행위에 앞서 제일 우선적으로 건축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 학교건축도 예외는 아니며, 크게 [그림 1]과 같이 4가지의 목적¹⁾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림1] 건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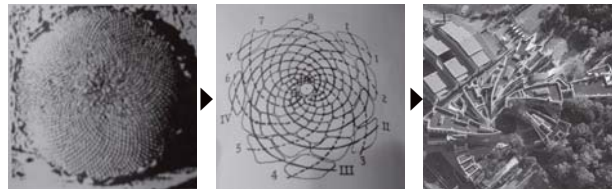
특히, 학교건축은 교육목표, 학교운영방식, 교육과정, 교수-학습형태 등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가치적 요구조건 이외에도 사용자(교사, 학생, 지역주민 등)의 요구조건, 미적(美的)요구조건, 환경적 요구조건 등을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충족시켜야만 훌륭한 학교건축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학교생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수-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해외의 여러 우수한 학교건축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학교건축의 기술적 요소를 발굴, 소개하고자 한다.

II. 학교건축의 공간과 형태는 아이들의 사고를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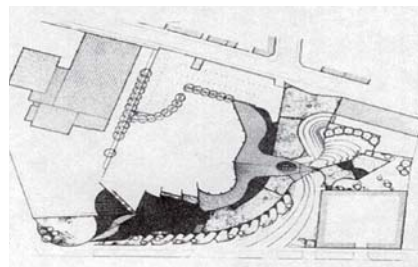
독일의 Heinz Galinski School은 유대인 학교이다. 대

부분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 지역에 유명한 건축가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학교로 건축하는 예가 종종 있다. Heinz Galinski School은 건축가 Zvi Hecker가 해바라기로부터 기하학적 도형을 통해 학교건물의 배치형태를 디자인하였다.



해바라기를 기하학적으로 형상화한 독일 Heinz Galinski School의 내부공간은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되어져 있다.

또한 프랑스의 Collge Elsa Triolet는 건축가 Ricardo Porro가 설계한 중학교이다. 이 학교는 독수리를 형상화하여 학교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내부구조까지 디자인하였다.



프랑스 Collge Elsa Triolet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형상으로 학교건물을 배치하였다.



독수리의 주둥이부분이 주현관이며, 입면의 창과 창틀은 독수리의 날개를 형상화하였다.



1층 현관 내부 홀은 독수리 주둥이리 내부처럼 건축 구조적으로 디자인하였다.

1) 이호진(1991), 건축계획·설계론, 산업도서출판공사

World Education



이렇듯 어떤 사물 또는 형상을 이미지화하여 건축 또는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특히 창의성이 요구되는 학교건축의 경우는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Ⅲ. 학교건축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학생, 교사에게 달려 있다

건축뿐만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고객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 키워드는 혁신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1970년대 스칸디나비아에서부터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용자 참여디자인(User Participatory Design) 또는 사용자 중심디자인(User Centered Design)으로 불리어지면서 제조,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발전되고 있다(Blythe 2001; Henry 1998; Johnson 1998; Salvo 2001; Spinuzzi 2003). 최근 영국은 학교에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한 학교디자인 품질지표(Design Quality Indicator for School, DQIfS)를 별도로 개발하여 학교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DQIfS는 친환경, 정보화, 복합화 등 학교건축의 핵심적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하여, 디자인뿐만 아니라 의견수렴능력(일명 “Soft Skill”)을 키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개별 학교건축사업의 특성에 맞게 DQIfS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국 Acland Burghley Secondary School의 야외 구내식당(Canteen)모습. 한눈에 보아도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이 건축물은 학생집단에 의해 고안되었다.



독일 International School of Stuttgart의 상담실 내부 전경. 언뜻 보기에도 우리나라 상담실 내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가정집과 같은 편안한 색상과 소파, 그리고 밝은 분위기의 실내 환경은 학생들이 쉽사리 꺼내놓기 어려운 고민과 상담 거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Erika-Mann Elementary School의 리모델링은 노후된 복도와 부족한 기존 교실이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교사들의 아이디어에 의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사가 제안한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복도와 교실 간의 벽 하부에 개구부를 만들어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통로를 만들었다.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교사가 착안한,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가는 벽 아래 부분의 개구부 전경. 아이들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매트가 깔려 있다.



Erika-Mann Elementary School의 복도 전경. 일명 “거울의 방”으로, 아이들이 천장과 벽에 달린 거울과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쉴 수 있다.



Ⅳ. 창의적 인재양성, 우선 학교에 창의적인 공간부터 만들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은 당연 학급교실이다. 사실 학급교실은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급교실을 한번 상상해 보자. 학교급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실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거의 유일한 형태와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 Kastellet School의 학급교실 형태는 일명 "T"자형이다. 복도를 두고 1개 학급교실이 제각기 3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마다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에 맞도록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다. 즉, 다양한 교수-학습형태가 물리적 공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소파가 있는 공간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놀이 등을 통한 학습이나 공동으로 협력하는 작업공간으로 활용된다. 다른 공간은 PC를 설치하여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수업공간으로, 또 다른 공간은 칠판(또는 화이트보드)을 설치한 강의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는 학급교실을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학급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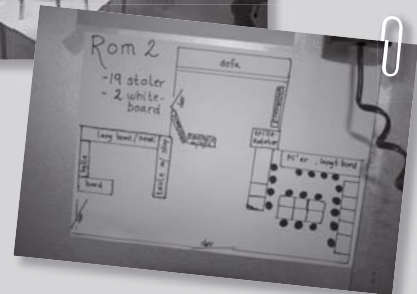
미국 시애틀에 소재한 St. Thomas School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은 종합교실형으로 설계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교실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유리한 학교운영방식이며, 대부분의 교과활동이 학급교실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2개의 학급교실 사이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과 교사실, 다용도실 등이 배치되기도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휴식,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는 일반 가정집의 거실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게 구성되어져 있다.



창가에 소파를 두어 학생들의 휴식, 놀이학습, 공동작업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화이트보드와 책, 걸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강의 공간이다.



노르웨이 Kastellet School의 학급교실 평면은 T자형으로 1개 학급이 3가지의 독특하고 다양한 교수-학습공간을 지니고 있다.



학생2~3명당 1대의 PC를 설치한, 정보화기기를 활용하는 수업공간이다.

World Education

최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드라마실을 요구하는 예가 종종 있다. 물론 빼듯한 우리나라 학교시설 예산과 면적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생각만 조금 달리 하여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

한 이야기이다. 영국 Marlowe Academy의 시청각실은 그 용도를 복합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평상 시에는 시청각실로 사용하다가 드라마실과 같은 용도를 원할 경우 전동식 의자를 한쪽 벽면으로 잘 정리해 두면,



미국 St. Thomas School의 종합교실은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면적과 다양한 교구,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2개 교실 사이에 간식을 조리할 수 있는 다목적 유틸리티 공간과 화장실, 교사실을 두고 있다.



교실 내 다락 공간과 그 하부공간은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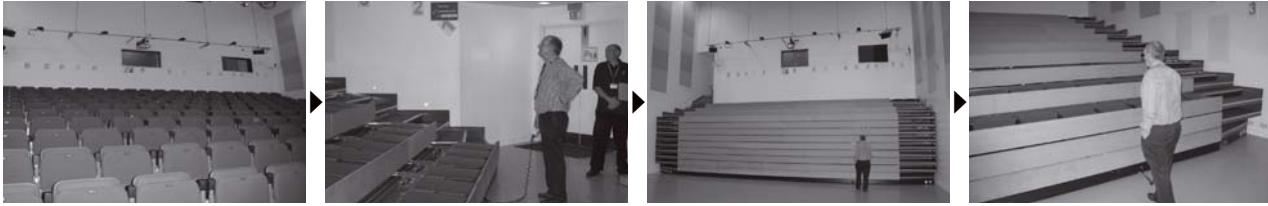
화장실의 문은 상, 하부를 분리,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 항상 학생 안전을 위해 자연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교사실과 교실 간의 창문은 반사유리로 되어 있어 교사실에서는 교실 내부를 볼 수 있지만, 교실에서는 교사실 내부를 잘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지 통행을 위한 복도뿐만 아니라,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두어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가정집의 거실처럼 안락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영국 Marlowe Academy의 시청각실이 다목적 공간으로 변하는 장면

드라마실과 같은 넓은 다목적 공간에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V. 친환경적 학교공간 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 학교건물이 포함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학교건축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지만, 실상은 제한된 예산에 의해 고효율 기술요소의 도입과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부분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으로 학교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건축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다면, 건축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친환경적 기술요소를 도입,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미래 사회의 구성원을 양성시키는 특수한 시설인 만큼 친환경적 기술요소와 연계한 교육 및 생활 프로그램과 연동해야만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일본 하카다초등학교(博多小學校)의 경우 가장 최상층의 교실 하나를 야외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면서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자리는 학생들의 추락방지를 위해 친환경적 수종으로 밀식 식재하였다.

일본 동경 코우와초등학교(光和小學校)의 경우 학교건축에 대체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친환경적 기술요소인 태양광, 태양열, 풍력, 우수이용 등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사례이다.



일본 하카다초등학교(博多小學校) 교사동 최상부층의 야외 학습공간의 복도 상부에는 태양광 전지판(solar cell)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이동하면서도 실제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실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독일 Grundschule Gemeinde Schulzendorf의 외벽마감재는 실제 Schulzendorf 지역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껍질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친환경적 입면효과(Facade Effect)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윈스터에 위치한 Wartburg Grundschule의 외부공간은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수생 비오톱(Biotop)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수생동·식물을 관찰하기도 한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Fanny Hansel Grundschule는 외부 태양에 의한 오후의 강한 빛과 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통식 차양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교실 내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World Education

일본은 법적으로 학교시설에 수영장을 반드시 설치하여 야만 한다. 물론 코우와초등학교에도 야외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수영장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식음수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의 거점 피난소(shelter)로 사용되기도 한다.

패시브(passive)한 친환경 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학교 시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으뜸은 당연 독일이다. 실제로 학교가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에서 전량 구매하여, 학교는 독일 전력회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학교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일명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가 학교에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 코우와초등학교의 교사동 1층 바닥 하부(지하)에 우수 저류조가 설치되어있어 화장실 세정수, 학교조경수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야외 수영장은 평상 시 수영장으로 활용되다가, 재난발생 시 학교가 지역주민의 피난소로 이용될 경우 정화설비(右)에 의해 식음수로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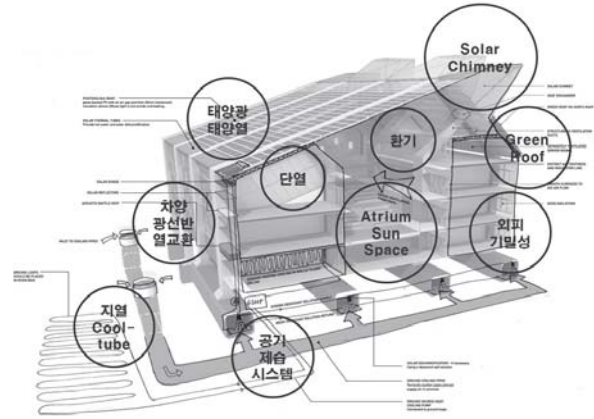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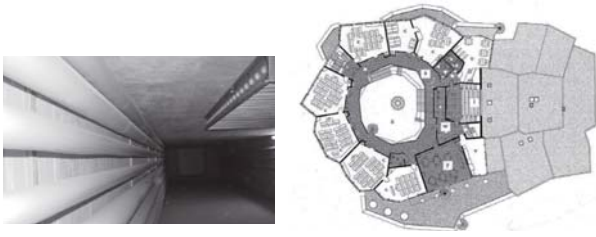


일본 코우와초등학교(光和小學校)의 최상부층 1개 교실을 옥외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에너지는 실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담장에도 설치되어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신축 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학교건축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ZES(Zero Emission School)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도시에 새로운 모형의 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ZES 프로젝트”의 개념도. 새로운 학교시설 모형으로서 학교시설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친환경적 기술요소가 적용되어 있다.



독일 쾰른에 위치한 Freie Waldorf schule의 지열을 이용한 냉, 난방시설. 외기의 온도는 항상 지표면 이하의 온도보다 높거나(겨울철), 낮다(여름철). 이러한 온도차를 이용하여 외기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여 실내 냉, 난방 부하를 줄이는 패시브(passive)한 친환경 기술요소가 활용되고 있다.



독일 본에 위치한 Bodelschwingschule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 특히, 이 학교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기존학교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 못지않게 학교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행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장되기 일수다. 그리고 이 모든 탓을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돌리고 있다. 좋은 제품이 반드시 비싼 제품이 아니듯, 좋은 학교가 꼭 비싼 학교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야말로 가장 좋은 학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Worl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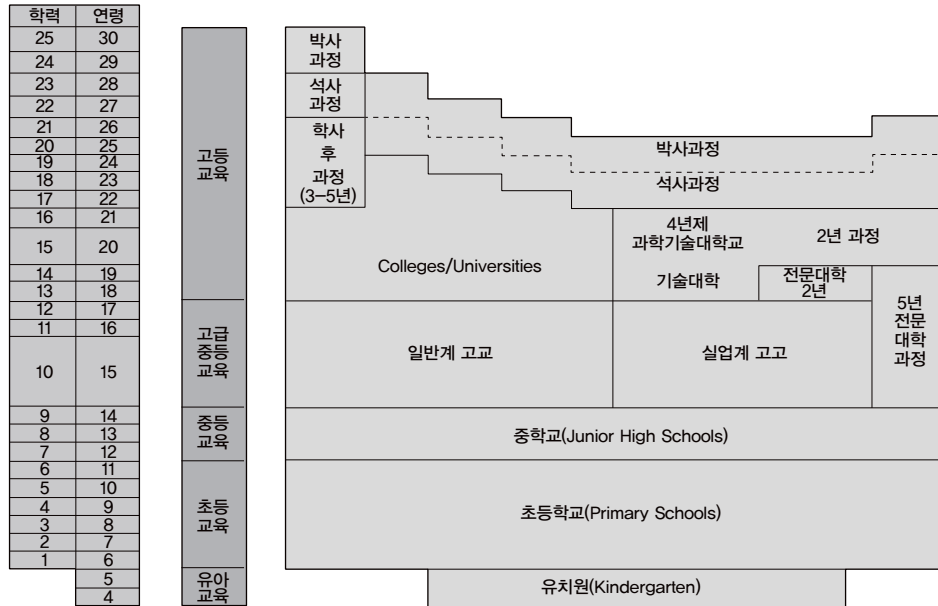
글
•
김종갑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대만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제 개편

I. 대만의 교육제도

대만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기본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과정이고, 이후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계 고교(General High School)와 실업계 고교(Senior Vocational School)로 나누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5년제 전문대학(5-year Junior College) 과정이 있다. 일반계 고교 졸업자들은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대학(Universities/Colleges)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대

학(Technical Colleges)이나 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진학할 수 있고, 실업계 고교 졸업자들도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문계 고교 졸업자는 일반대학에, 실업계 고교 졸업자는 기술대학이나 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현재 대만 인문계 졸업자의 95%, 실업계 졸업자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분포는 인문계와 실업계가 각 40%와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일반대학 뿐만 아니라 기술대학과 과학기술대학에서도 석사 혹은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대만의 고등직업교육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제도로 운영



자료 : Technological & Vocational Education In Taiwan, ROC Summary of Education at All Levels in SY 2011, 대만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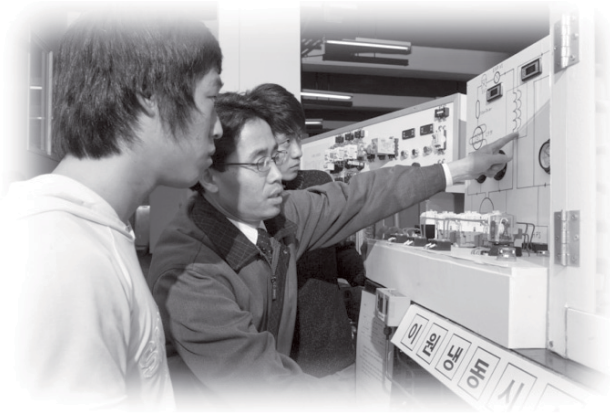
[그림1] 대만의 교육제도

되고 있다.

5년제 전문대학(5-year Junior College)은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5년의 학제로 운영된다. 졸업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준학사학위를 부여받게 된다. 2년제 전문대학(2-year Junior College)은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주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인문계 졸업자 가운데서 직업경험이 있는 학생도 지원가능하며, 2년 과정을 마치고 준학사학위를 취득한다. 일반대학은 기본 4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의학과정은 7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학기술대학교와 기술대학은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 2년 과정을 제공하거나 실업계 고교 졸업자나 인문계 고교 졸업자에 대해 4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사 후 프로그램(Post-bachelor degree program)은 의학, 혹은 중국 전통한의학과정으로 1982년 5년 과정으로 개설되었는데,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특정분야의 학위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통상 4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의학, 중국전통한의학, 법률 전공의 경우에는 1년 혹은 2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





II. 대만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체제개편 과정

대만정부는 자국의 경제발전이 직업교육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직업기술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50년대 대만정부는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농업생산기술 분야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 계획은 농업생산력 증대, 노동집약적 생필품사업의 발전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직업교육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상업교육 및 고등직업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1960년대는 대만 수출입산업의 확대기였으며 관련 분야의 기술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특히, 기술전문 인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직업기술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실업고교와 전문대학을 통합한 5년제와 2년제 전문대학체제가 시작되었다. 직업교육분야에서는 산업 및 상업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의 숫자와 학생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일반계 고교에 비해 실업계 고교

의 비율이 4:6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대만 정부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들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전문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기술교육기관(Technological Institutes)인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전문대학에 대해서도 산업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 대만정부는 고급기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관련분야의 기술전문 인력의 부족 등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직업기관의 숫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식경제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대만정부는 기술대학의 숫자를 증대시켜 나가는 데 자격이 있는 전문대학을 기술대학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하였다. 기술대학 가운데서 자격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대학(University of Science of Technology)으로 승격시키게 되었다. 특히 대만정부는 1996년에 제정된 「대학 및 분부설립표준」을 계기로 전문적인 고등직업기술교육을 위해 과학기술대학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대만 교육부는 1996년에 「大學及分部設立標準」을 제정하여, 4년제 과학기술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①전문대학으로 3년 이상 경영 ②도서관은 면적 5,000㎡, 장서 15만권 이상, 20가지 분야의 전문서적 서비스 제공 ③교지는 5 hectares 이상 ④교육분야 전 영역에서 일정 이상 시설 및 장비 구비 ⑤학과단위평가기준 1등급 90% 이상 ⑥전 행정부서 1등급 ⑦학부 교수 1인당 학생 수 40명(주·야 포함) 이하, 주간반의 경우 25명 이



하 ⑧학부 전임교수 최소 40% 이상 ⑨최근 3년간 학과별 평균 최소 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구체적인 성과 등을 설정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대만의 학령인구가 급감함으로써 2015년 이후 약 50~60개의 대학 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2009년 기준 대만의 출산율은 1.0명으로 한국의 1.2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1980년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차별 철폐와 함께 교육방향이 엘리트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전환되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저하하고, 이들 학생들이 산업체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입학자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만정부는 산업체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과 현장 적응력이 높은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98%에 해당하는 대만의 산업구조상 직무의 고도화와 첨단화, 과학기술 분야의 확대, 3차 서비스 분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고등직업교육체제 개편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 일반대학의 직업교육영역 확대로 인한 전문대학의 위기가 확산됨으로써 대만정부에서는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표1〉 대만 고등교육기관 현황

분류	구분	1996	1997	2003	2010	2012	비고
연구중심	일반대학	57	58	70	72	72	학사+석사+박사
고등직업 교육기관	과학기술대학교	0	5	17	56	51	학사+석사+박사
	기술대학	10	15	55	31	26	학사+일부(석사)
	전문대학	70	61	16	15	14	2년 간호 조무과정
계		137	139	158	174	163	

* 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중화민국【대만】고등직업기술교육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 2012.

1996년 이후 대만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은 체제개편을 통해 1997년 5개의 과학기술대학교가 인가되었고 15개의 기술대학이 인가를 받았다. 그 후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이 모두 개설 가능한 과학기술대학교는 2012년 현재 51개 대학으로 증가하였고, 학사학위 과정과 일부 석사학위과정의 개설이 가능한 기술대학은 26개가 되었다.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은 현재 간호조무과정만 남아 있고, 나머지 전문대학은 모두 기술대학과 과학기술대학교로 전환한 실정이다.

대만 고등교육 및 고등직업교육의 위기에 대응하여 과학기술대학교는 교수 임용에서 현장경력(10년 이상) 의무화 및 산업체와의 공동교육과정개발(자격증 취득 의무화)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고등직업교육의 심화를 위한 석·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여 기술 및 R&D를 통한 특허 및 기술이전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교수의 기술개발, 교육, R&D, 산학협력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교수들의 외국어(특히 영어) 구사능력의 향상을 통한 국제화 유도 및 해외 유학생(특히 동남아)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과학기술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산학협력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요인에 대한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위한 지역산학협력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대학교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기능센터의 설립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기술대학교는 센터중심의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학과 혹은 특정 전공 중심의 기술개발이 아



World Education

년 센터 중심의 특성화를 통해 장비의 집중화, 학문 간 연합을 통한 융합, 기술개발, 창업 및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대만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체제 개편의 의미

이처럼 대만정부는 학령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전문대학의 위기에 대응하여, 대만 교육부가 주도하여 전문대학을 직업교육의 축으로서 기능을 인정하고, 고급기술인력 수요에 맞추어 4년제의 과학기술대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대만의 과학기술대학교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고, 기업체와의 공동기술 개발, 현장 맞춤형 교육(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이라는 면에서 보면 일반대학에 비해 기업체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

고 있고, 학부모들의 일반대학 선호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과정 편성에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 실습교육의 비중 증대, 산업체 경력 교수 우대 등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교수 개인의 산학협력 성과를 교수업적 평가에 활용하고, 교수업적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며, 교수평가에서 2회 이상 과락을 하게 되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대학교의 대부분의 학과는 6개 이상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데, 엄격한 산학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는 초기에 인문계열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교수들의 저항도 있었으나 과학기술대학교의 정체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적극 수용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업적평가는 대만 교육부의 평가 지침에 따라 대학별 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영역은 크게 학생지도역량(교육역량, 평생지도교수로 인생 멘토 역할, 취업지도 실적), 강의평가, 개인별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지도역량에 대한 평가는 교육의 현장성 및 실용성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과학기술대학교는 3년 주기로 교수들의 현장연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초 학습 또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3회에 걸쳐 지도교수가 전공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향상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산학협력에 대한 실적평가는 산·학·연·관 협력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여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애로 기술 해결, 사업에 대한 멘토링, 취업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실무교육 역량을 토대로 산학협력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만 교육부에서는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의 질






을 제고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모든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하여 1등급은 정원 증원 가능, 2등급은 정원 동결, 3등급은 정원 축소, 4등급은 모집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현장 실무경력이 있는 교원의 채용, 교원업적 평가에서 산학협력 및 실무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의 2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과학기술대학교로 전환하여 학사과정에 이어 석사·박사과정이 설치되면서 대만의 고등직업교육은 중등단계의 기술반,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교로 이어지는 직업교육과정의 일관된 체계성을 가지게 되었다. 대만의 고등직업교육은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기술진보에 따른 대만정부의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따라 발전하였는데, 실업계고,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종합과기대학 등으로 완벽한 직업기술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직업교육과정에서 긴밀히 연계되는 새로운 학제를 완성하였다.

이처럼 대만은 전문대학을 4년제 과학기술대학교로 개

편하여 고급기술 및 학술적 연구 이외의 인적자원개발 부분은 과학기술대학교에 기능과 역할을 주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학원 과정을 두어 산업현장 프로젝트에 의한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대만 고졸자의 약 95%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인문계고와 실업계고가 일반대학과 과학기술대학교를 교차 지원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인문계는 일반대학으로, 실업계는 과학기술대학교로 진학하는 Two Track이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전문대학이 기술대학과 과학기술대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산학협력과 기술의 전문화라는 교육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만일 전문대학이 과학기술대학교로 전환한 후 이론중심의 일반대학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고등직업교육 체제개편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World Education



스마트교육

해외 우수사례

글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스마트교육기획부 부장

I. 들어가며

2011년 6월 29일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발표된 지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2012년은 스마트교육 원년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스마트교육을 ICT교육의 한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스마트교육을 스마트기술 활용교육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스마트교육은 우리나라만이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름만 다를 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로 미래의 교육을 준비하는 흐름의 하나이다. 미래교육에 정보기술을 빼 놓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정보기술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즉, 우리가 교육을 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고, 문제가 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스마트교육은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세종시의 첫마을 학교들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정보기술을 단순히 적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미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미래교육이 가고자 하는 5가지 개념으로 스마트 학교(Smart School), 안전한 학교(Safe School), 즐거운 학교(Fun School), 글로벌/지



역사회와 연계된 학교(Connected School), 생태지향적 학교(Eco-Friendly School) 등을 제시하였다(Soonwon, Jeong, 2011). 이와 같은 5가지 개념이 적용된 것이 세종시 첫마을 학교이다. 예컨대 참샘초등학교의 1층은 개방형 도서관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은 미래학교 건축(BSF) 프로젝트를 통해 오래된 학교를 미래를 준비하며 리모델링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미래학교 프로젝트는 빈민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교육의 본질인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며, 이것이 스마트교육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선진국의 스마트교육 추진 사례는 세계 각국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국의 사례는 정부주도인 경우도 있으며, 민간주도의 사례도 있다.

II. 주요 선진국의 스마트교육 우수사례

1. 미국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래학교(School for Future) 프로젝트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필라델피아 교육청(School Districts)과의 협력을 통해 School of the Future(SOF)를 개교하였다.¹⁾ 필라델피아 지역은 흑인 가정이 대부분

이며 소득 수준이 낮고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뚜렷한 학업 목표가 없고 학업 흥미도도 낮다. 때문에 SOF에서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고등학교의 환경을 재설계하고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ICT를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MS, 2006).

SOF의 교육과정은 지속적(continuous), 삶과 연계된(relevant), 적응적(adaptive), 학습 공동체(learning community)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래학교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The School of the Future Curriculum Working Committee)는 미래학교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1) 서로 연계되고 관련된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2) 능률적이며 필수 교육과정 중심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3) 융통성 있고 지속가능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에 맞는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적용한다. 5) 미래학교 학습 공동체를 위한 전문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1) <http://www.microsoft.com/education/schoolofthefuture> 참조

World Education



SOF는 2006년부터 3년간 추진되었는데, 그 결과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소수인종 및 빈곤계층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기회를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 환경적 측면에서 SOF는 공연시설, 과학실험실, 체육관, 유무선 인터넷 및 첨단 교육 기자재가 구비된 교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 채광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고자 더 나은 교육환경을 통해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력하였다(MS, 2008).

2. 핀란드 : Innoschool 프로젝트

핀란드의 대표적인 미래학교 프로젝트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미 종료된 민간 프로젝트이다. 1단계 기간(2007년 1월~2008년 8월)에는 이론적 연구의 토대 정립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후 2단계 기간(2008년 9월~2010년 12월)에는 글로벌 마켓에 적합한 미래학교 개념 구체화를 목표로 하였다.²⁾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학문적인 모델과 구조의 정립을 강조하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능력 있는 연구자들이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다. 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헬싱키 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와 핀란드의 주요 대학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와 캘리포니아 주립대(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가 참여하였다.

이노스쿨 프로젝트에서는 미래학교의 4가지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InnoArch(학습공간 구성), InnoEdu(혁신적 교수방법), InnoPlay(놀이와 같은 학습환경 구성), InnoServe(교육서비스의 혁신)의 네 가지 연구 프로젝트가 유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InnoArch는 물리적 학습공간의 설계가 어떻게 성공적인 학습 과정 및 결과와 연관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두 번째 영역인 InnoEdu는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학습 방법 연구를 담당하며, 특히 형식적 학습과 비형식적 학습의 연관성과 가능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영역인 InnoPlay는 놀이와 같은 학습환경 설계를 목표로 게임기반 학습, 물리적 움직임, 창의성, 지식의 공동적 창출과 같은 주제를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InnoServe는 학교가 학습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컨셉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초점을 둔다.

핀란드의 InnoSchool 프로젝트의 특징으로는 1) 비형식적 학습공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 및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환경 구성, 2) 미래학교 공간 구성에서 '놀이'의 측면 강조, 그리고 3) 학교의 수요자 즉 학생 및 교사,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다.

2) <http://innoschool.tkk.fi/>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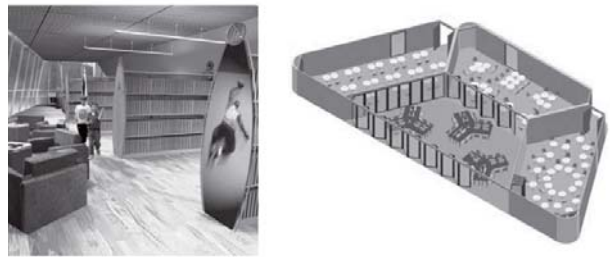
3. 영국 : '미래학교 건축 프로젝트'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2004년부터 시작된 미래학교 건축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영국 내 모든 학교를 재건축하거나 지속가능하도록 새로 꾸밈으로써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21세기적인 시설에서 학습하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The Public Accounts Committee, 2009).

미래학교 건축 프로젝트는 영국 내 3,500개 중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차에서 6차에 걸쳐(Waves 1-6) 현재 약 1,000개의 학교가 미래학교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85개 지역교육청에서 미래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를 새로 짓거나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는 프로젝트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초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³⁾ 이 프로젝트에서 학교설계의 주된 요소로 꼽는 것은 유연성(flexibility)과 융통성(adaptability)이다. 유연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각기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에 적합하도록 교실환경을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게는 교실 내 물품을 옮기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레이아웃이 가능하도록 교실의 크기와 형태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융통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의 부지와 크기,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요소로, 공간의 크기나 용도를 위해 교실 내부의 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뜻한다.

미래학교 설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에는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혁신을 추구하는 학교, 학생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학교, 안전하고 배움을 장려하는 학교, 새로운 교

육학적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학교, 확대와 변형이 쉬운 선형적 구조, 학습 공동체를 위한 설계, 내부 마당과 야외 교실이 있는 학교,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학교, 지속가능성이 있는 학교 등을 꼽고 있다.



[그림1] 미래학교의 학습자료실 및 별집 모양의 교실(계보경 외, 2011)

4. 싱가포르 : Futureschool@Singapore 프로젝트

싱가포르 정부는 1997년에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래의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지식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1997년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Thinking School, Learning Nation'을 하여 실시된 정책으로 이후 추진된 ICT 정책과 실행의 토대가 되었다.

싱가포르의 미래학교 프로젝트는 2006년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가 'Intelligent Nation 2015(줄여서 iN2015라고 통용됨)'라는 국가정보화 10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중 하나의 과제로 Future-Schools@Singapore(FS@SG)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비통합적인 ICT 활용을 지양하고, 학교 전체를 ICT라는 매체로 개혁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교육혁신 정책이다.⁴⁾

3) <http://www.education.gov.uk/schools/adminandfinace/schoolcapital/funding/bsf> 참조

4) <http://www.ida.gov.sg> 참조



Worl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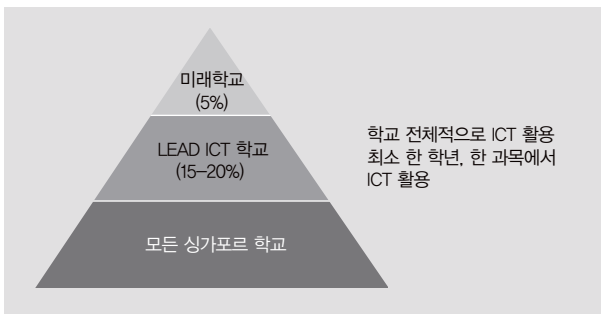


Digital Media(IDM)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2년까지 8천만 달러(한화 약 7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에는 여섯 개의 미래학교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정부는 2015년까지 15개의 미래학교를 선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6개 학교가 선도학교(Pioneer Future Schools@Singapore)로 운영되고 있는데, Beacon Primary School(초등), Canberra Primary School(초등), Crescent Girls School(중등), Hwa Chong Institution(고등), Jurong Secondary School(중등),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중등) 등이다. 6개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미래학교 프로젝트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FutureSchools@Singapore는 능력위주의 교육 패러다임과 혁신적 학교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이곳에서의 성공적인 경험과 교수-학습의 실재를 타 학교들이 도입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FutureSchools@Singapore의 재정적 지원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NRF)의 Interactive &



[그림2] 교수방법의 확장과 지속성을 지원하는 계층적 모형 (Koh & Lee, 2008)



〈표1〉 미래학교별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

학교명	주요 특징
비콘 초등학교 (Beacon Primary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맞춤형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3D 가상 학습 시뮬레이션 환경("Beacon World") 제공 - 학생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웹 기반 환경 제공 - 한번 클릭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학교 포털 환경 제공
캔버라 초등학교 (Canberra Primary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자, 글로벌 학습자, 조화로운을 유지하는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협력적 지식 구축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을 통하여 21세기에 요구되는 기술들을 확보 - 경험적 학습과 질문중심의 학습 - 가상 학습 환경을 3D 교육 게임으로 제공 - Canberra Live!라고 불리는 학습 환경과 콘텐츠 제공용 통합교육 환경 구축
크레센트 여자 중학교 (Crescent Girl's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된 교과과정, 기술을 통한 다양한 평가방법, 향상된 기술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학습 - 물리적 학습공간과 가상의 학습환경을 유기적으로 연동 - 학생들이 개인 학습도구를 이용하여 학습 포털 iCLS (i-Connect Learning Spaces)에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접근 가능 하도록 지원 - 학생, 교사, 전문가 모두 VGLF(Virtual Global Learning Faculty) 웹 포털을 사용하여 필요한 자료와 도구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배우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
화충 인스티튜션 (Hwa Chong Instit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충 넥서스(Hwa Chong Nexus: HCnX) - 이러닝(e-learning) 솔루션 구축 : 경계 없는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학습 커뮤니티, 개인의 학습과 그룹을 통한 학습 두 가지 모두를 제공 - 실제로는 직접 경험해 보기 힘든 것들을 가상학습 공간을 통해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환경 제공
주룽 중학교 (Jurong Secondary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CH 툴을 제공하여 개성(Personality), 행동(Behavioral), 인지(Cognitive), 인문학(Humanising)을 두루 지원 - 가상 현실 기술로 연구와 학습 프로세스 지원이 가능한 MavenWorld 제공 - 지리 정보 시스템(GIS)과 연계된 3D 가상 필드 학습 지원 -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시켜 주는 엔진을 사용하여 스마트 검색을 하도록 하는 환경 제공 - 미디어 활용법에 대한 교과과정 개설
싱가포르 과학 및 테크놀로지 학교 (School of Science & Technology Singap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를 100% 활용하는 혁신적인 교육방법 제공 -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를 학교의 모든 교과과정에 적용 → 실현 가능한 모델을 다른 학교에 제공 - 새로운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도구들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방법 개발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

>> 참고문헌

- 계보경 · 김현진 · 서희전 · 정종원 · 이은환,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연구보고 KR 2011-12, 2011.
- Koh, T.S. and Lee, S.C. (Eds) (2008),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education: Singapore's ICT Masterplans 1997-2008, Singapore: World Scientific.
- The Public Accounts Committee,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 renewing the secondary school estate -Twenty-Seventh Report of Session 2008-09, 2009
- Soonwon, Jeong, "Future School Project in SMART Education Policy", e-ASIA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2011, 12.
- Microsoft Coporation,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 An opportunity to personalise learning and fundamentally re-think the business of education, 2005.
- Microsoft Corporation, Building the School of the Future - A Guide for 21st Century Learning Environments, 2010.
- Microsoft Corporation, Building the School of the Future- Discovery Brief 6: Building Better Learning Environments with Green Building Design, 2008.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발전방안



글
•
고영진
신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경상남도교육감



I.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함)는 1992년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으로 임의기구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에 규약을 정하면서 매년 5~6회 정도 정식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10년만인 2006년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협의체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법적기구화가 되었다.

이듬해 2007년도에는 교육감협의체에 대한 설립 신고 조항이 같은 법의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으며, 2008년 1월 25일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법적기구화에 따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서울 중구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의회 설립신고를 하였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은 과거와는 달리 주민직선 선출방식과 함께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교육에 관한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게 됨에 따라 협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도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회 사무소 설치에 근거하여, 협의회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2012년 7월 10일부터 탄생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Ⅱ. 새로운 출발

지난 6월 14일 울산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장으로 필자가 선출되었다. 이와 함께 부회장으로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 감사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추대되었다.

필자는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로지 교육을 위한 협의체다. 일부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양분된 시각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역 교육을 리드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가는 교육자치단체장이다. 마땅히 지역간 경계를 넘어 상호 정보교류와 범국가적인 교육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감협의회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의 개선 노력과 교육현안에 대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 수도권역 교육감이 주축이 되었던 협의회가 지역 교육감이 회장을 맡으면서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새롭게 출발한 협의회의 목표이다.



Ⅲ.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 역할

1. 법적기구로서의 기능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10. 2. 26]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

-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 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 29, 2010. 2. 26, 일부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

-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도교육청 간 정보 교환 및 교류
2. 교육 관련 사항의 공동 개발 및 연구
3.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연구
4.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5. 교육 관련 법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제출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 유·초·중등 교육관련 대표기관으로 정립

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각종 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안건을 심의하는 주요 기능이 있다. 이 역할은 협의회 총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약 제5장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기능·회의·의결 업무를 규정하여 협의회 총회가 있기 전에 실무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각종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공동의 현안을 협의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제도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학입학 제도자유·초·중등 교육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관계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정립해 가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한 다수 기관들이 협의회와 연구 및 사업 활동과 관련,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함으로써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관련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역할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7월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 시·도교육청 간 정보교류활동 활발히 전개

최근 협의회는 학교폭력 및 학생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시·도교육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상담 및 보호·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시·도교육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동 개정안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개정안의 철회와 함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협의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상호 연계·협력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철회를 추구하고 시·도교육청 간 공동 현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과 공동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4. 최근 4년간 협의회 심의안건 추진현황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09년 6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24개 안건을 의결해 교과부에 건의하였으며, 교과부는 그 가운데 11개 안건은 수용하고, 2개 안건은 부분수용하여 수용률 46%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7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해 25개 안건을 의결, 이를 교과부에 건의해 13개 안건이 수용되고 5개 안건이 부분적으로 수용돼 수용률 52%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10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41개 안건을 의결, 그중 32개 안건을 교과부에 건의해 수용 22개, 부분수용 6개로 69%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는 5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25개 안건을 건의해 70%라는 최고의 수용률을 올렸다<표1 참조>.

〈표1〉 협의회 개최 및 안건 의결·수용 현황

연도	협의회 개최 횟수	안건 의결 건수	교과부 건의 여부		교과부 검토 의견	
			건의	미건의	수용 (부분수용 포함)	수용률
2009	6	24	24	0	11(2)	46%
2010	7	25	25	0	13(5)	52%
2011	10	41	32	9	22(6)	69%
2012	5	25	20	5	14(4)	70%
합 계	28	115	101	14	60(17)	

IV. 현안과 과제

협의회가 본격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 시·도회의장협의회 등의 경우와 같이 조직과 정원이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의회가 현재 안고 있는 현안은 협의회 기능과 운영에 관한 후속조치 법률개정 건으로, 지난 2008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283회 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며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추구하자는 본래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관련 법률 및 개정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현재)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할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42조(협의회의 설립)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교육현안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전국 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하는 사무 중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의 협의 및 연구개발
2. 교육현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
3.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4. 전국 단위 학생모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4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에 제4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운영지원 및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 발전방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교육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 동안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유·초·중등 교육의 방향 제시 및 쟁점사항 해결 등에 대해 전 시·도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 광범위한 연계·협력관계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안건을 협의·건의하는 관계적인 수준을 넘어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방간 교육정책을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협의·조정기구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 시·도에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은 다소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교육만이 희망’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시·도교육감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동반자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 합의 도출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도간 여건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내실화와 신뢰회복, 인성교육 등 교육정책의 공통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2.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활동 실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주어진 법령을 준수하고 시·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잘 지켜 나가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 용역과 워크숍 등 각종 연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3.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및 협력방안 모색

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등은 수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세계 교육선진국의 협의체와 유사한 기능 강화

그 동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 등을 협의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협의회가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안목을 높여 세계 교육선진국 교육감 협의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추진과 향후 과제

글

장보현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과장

I. 문제제기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대입정원의 고교졸업생 수 초과라는 우려로 나타나고, 2018년부터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최근 들어 고등교육에 물려올 쓰나미를 피하기 위한 대학구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대학을 평가하여 하위권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하는 데 이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들 대학 중 경영부실에 대한 실사를 거쳐 폐쇄대상 학교까지 가려낼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다져진 토양 위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역대학시대를 열어 간다는 모토로 지역대학을 지역의 지식과 산업의 허브로 삼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가 하면 지난 8월 27에는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대학자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대학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일차적인 수혜대상은 지역의 거점에 위치해 있는 국립대학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립대가 명실공히 지역의 인재양성과 산업발전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립대는 재정과 인력을 국가로부터 상당부분 지원받기 때문에 사립대와 출발선이 달라 상대적인 여건이 좋아서 재정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 대학 등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대학으로서 여건이 좋다는 것 자체가 높은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 국립대는 국가기관으로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만은 않은 것 같다. 국립대학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자.

첫째,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규모도 늘고 있으나, 교육성과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국립대의 상대적 비중과 지원규모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립대학은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기준으로 각각 10.5%, 23.5%, 2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10년 결산기준

으로 전체 대학재정 지원액(7조 395억원) 중 국립대학이 4조 2,129억원을 지원 받아 60%를 차지했고, 사립대학은 2조 5,906억원(36.8%)을 차지했다.

둘째, 국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기대가 있으나, 국립대의 역할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 4년제 일반대학¹⁾ 20개교와 주요 사립대 20개교를 비교한 결과,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수, 기술이전 수입 등에서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국립대가 위치해 있는 비수도권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80년대 까지 국립대가 우리나라의 교육과 연구성과를 견인해 나가던 시대를 되돌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표1〉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학 성과 비교

분 류	국립대	사립대
기술 이전 수입	495,684천원	699,811천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SCI급 / SCOPUS 학술지)	0.35건	0.44건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51.9%	58.7%



1) 교원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체육대, 방통대를 제외한 20개 대학

셋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사고력, 유연한 의사소통능력, 글로벌 활동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인성·소양 등 핵심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으나, 우리의 대학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9년 모집단위 자율화 조치 이후 모집단위 광역화에서 세분화된 학과중심의 학사운영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회귀²⁾ 함에 따라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제한하는 폐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여전하여 융·복합형 창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운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10. 9)'을 수립·추진하여,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총장직선제로 인한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대학 운영에 대한 성과검증 부족, 재정·회계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비효율,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학사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립대학 선진화의 완결성을 제

고하는 차원에서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2010. 8)'을 보완하는 내용의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거나 후속과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Ⅱ.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의 주요 과제는 '총장직선제 개선',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및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업적평가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총장직선제 개선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총장후보를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간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든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모든 국립대학이 후자에 따라 직선제로 총장후보를 선출해 왔다. 총장직선제는 도입 초기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직선제 시행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학내 정치화와 갈등을 비롯한 각종 병폐를 가져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총장직선제가 과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연구력 향상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손익계산서를 따져 볼 때가 되었다.

총장직선제 도입 당시,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 열망에

-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교원성과목표제, 법인화 등) 발표 : 2010. 9. 28
-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 발표 : 2011. 8. 23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 발표 : 2011. 9. 23
- 국립대학 발전추진위원회 구성³⁾ · 운영 : 2011. 10. 14-
-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확정 · 발표 : 2012. 1. 27
-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추진 MOU 체결⁴⁾ : 2011. 10-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2012. 5. 7
-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성과협약 : 2012. 5. 15
- 강원대, 총장공모제로 총장후보자 선정 · 추천 : 2012. 5. 31

2) 주요 사립대 10개교 : 56%(2008년)—64%(2011년), 거점 국립대 : 58%(2008년)—83%(2011년)

3)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

4) 4년제 38개 국립대학 중 31개 대학 체결

〈표2〉 총장직선제로 인한 부작용

선거 전	선거 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맥·학연 등에 따른 파벌 형성	'자기 사람 심기'와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주기
투서·비방 등 과열선거로 학내 면학·연구 분위기 저하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교수들 사이의 갈등 지속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 양상 속출	전문적 역량 없는 총장이 선출될 경우 경쟁력 저하
교수 중심의 선출로 대학공동체 의견수렴 곤란	교직원 급여인상 등의 공약에 따른 등록금 인상
사실상 외부 인사가 총장이 되는 길 차단	보직 약속과 공약 남발로 총장의 리더십 약화

부응하여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임과 대학의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으나, 직선제를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각종 공약에 의한 등록금 인상 등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더 부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학맥, 인맥, 지연 등에 따른 파벌형성과 과열 선거운동은 막대한 선거비용과 향응, 금품수수, 상호비방에 따른 학내 갈등을 낳았고, 이러한 폐해는 총장선출을 둘러싼 교수들의 정치화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역

량을 결집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급기야는 우리나라의 거점국립대를 대표하는 부산대가 작년 총장선거에서 선거부정에 따른 끊임없는 잡음에 시달린데 이어 올해 전남대도 선거과정에서 1순위와 2순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검찰기소로 인해 양 대학 모두 총장임용 제청 거부라는 비정상적 결말로 끝이 났으며 이는 선거과열이 낳은 대표적인 부정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정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취임 후에 역량 있는 보직교수를 임명하려 해도 논공행상의 부담 때문에 최적의 인사를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또,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후생복지에 관한 공약사항은 예산집행의 낭비와 함께 등록금 인상요인을 부추기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초래한다. 그런가 하면, 총장이 교육과정 개편, 특성화, 대학 간 통폐합 등 개혁과제를 소신 있게 밀어붙이기 어렵게 되는데, 이는 학내 교수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학이 지역사회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총장이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을 선도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학이 각자 형편에 맞게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총장직선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 기본골격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살려 선거방식이 아닌 공모제 등의 방법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 총장 후보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총장직선제 개선방식은 대학이 각자 처한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선거행위는 학내 정치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배제하되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선거 대신 총장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살린다. 예를 들어,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공모제를 도입하고 총장추천위원회와 별개로 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가 후보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다수 영입하여(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4분의 1 의무화) 공정성을 높이는 방식이 가능하다. 후보검증과정에서 서면심사, 인터뷰, 교직원·학생을 위한 청사진 발표 등을 통해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도 있다.

2.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지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으로 고등교육을 선도할 책무성이 있는데 비해 이러한 책무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점검하는 체계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는 대학 운영의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대학 운영의 자율화에 상응하여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증함에 따라 국립대학 운영을 평가·환류하여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 강점분야를 연계한 대학별 고유 기능을 촉진하고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국립학교 설치령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37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 운영성과 목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개별 국립대학 총장 간 4년 단위의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담은 성과협약을 체결한다. 성과협약서에 들어가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 국립대학 기능·역할과의 정합성 및 대학별 특성화에 부합하는 지표들로 구성되며 기능과 목표가 상이한 일반대학군(26개교)과 교육대학군(총 11개

〈표3〉 일반대학군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부문 (비율)	성과지표(안)	평가방법	평가 주기
공통 (45)	특성화 계획 수립·추진 성과	실적 등	1년
	지역사회 기여도·재학생 교육 만족도	실적 (설문조사)	1년
	기초 교양교육 활성화	실적	1년
	기성회 회계 등 재정운용의 적절성	실적	1년
	취업을 제고	실적+ 향상도	1년
자율 (55) ※예시	지배구조 개선, 전임교원 1인당 SCI&SSCI 논문게재 건수, 3대 학술지(Nature, Science, Cell) 논문게재 건수, 우수 해외/기업연구소 유치, 모집단위 광역화, 학사운영 선진화,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료, 상표·특허 등록 건수, 대학 재정 확충 다변화, 여성·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 제고 등	달성도	2년
	역점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非 자율·공통지표)	정성	2년

교, 교원대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8월말 현재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총장과 교과부 장관 간 4년 단위 성과협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며, 앞으로는 임기가 도래하는 개별대학의 총장과 장관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총장이 성과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학 학장은 대학의 장이 추천이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학장공모제’는 학내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학장으로 영입하여, 대학의 중추기관인 단과대학에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학장공모제는 국립대학법인, 교육대학 등을 제외하고 국립대학 27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학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내부 공모형은 보직발령의 형식을, 외부 공모형은 교원임용과 학장 공모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원임용과 동시에 학장으로 임용토록 하였다. 특히, 외부 공모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이 외부 공모형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교원 정원(T/O)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대학은 (가칭) ‘학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단과대학 발전계획 발표 심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학칙을 정비했다.

4. 학부교양교육 활성화 및 학사운영 선진화

작년 대학교육협회의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기초교양교육센터는 현재 기초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개별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핵심역량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대학은 교육목표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간다.

둘째, 융·복합형 신 교과목 및 교과군 개발에 착수하여, 글쓰기 교육, 학생주도형 체험교육 등 필수 역량 뿐 아니라 표절 예방, 녹색시민 소양 등 선진사회 구현에 필요한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도 개발한다. 교육과정과 강의 동영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오픈코스웨어로 개방한다.

셋째, 학생 친화적 성과 중심의 기초교양교육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각 대학은 개발된 평가도구를 통해 운영중인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문세계를 선도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학사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에도 착수했다.

첫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융·복합적 학사운



영을 확대하고 융·복합적 학과신설을 유도한다.
 둘째,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조치(2011. 7. 21. 고등교육
 법 개정·공포)로 대학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학기제
 운영을 유도한다.
 셋째, 학생 수업 선택권의 강화와 함께 강의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학생 강의평가 결과 공개를 유도하는 등 학
 생 중심의 학사운영을 유도한다.

5.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취약한 대학재정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1963년에
 설치된 기성회비와 관련하여, 회계가 각종 수당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후진적인 운영으로 전체 재정상
 태를 파악할 수 없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
 히, 서울대 등 8개 국립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작
 년 8월 국립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
 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기성회
 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송의 판결에서 국
 립대학 기성회는 법적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고,
 그에 따라 국립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각각 1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현재 이 사건
 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2008년도 이후 4차례에 걸쳐 교육과학기
 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
 하였다. 2011년부터는 각 대학의 기성회계 운영의 투명
 성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기성회
 회계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재정지원과 연계
 해 나가고 있다. 즉,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 규모, 인상
 륜 등을 평가하여, 과다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예
 산을 일정비율로 차등 감액하고, 교원 배정에도 반영하
 게 된다. 실제로 2011년도에 실시한 평가결과 하위 대학
 에 대해서는 2012년도 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 사업비
 등을 최대 3.5% 차등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우수 대
 학에 인센티브로 추가로 배정한 바 있다.

Ⅲ. 향후 과제

이제까지 제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에 이은 2단계 선
 진화방안의 수립과 후속조치에 따른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학사 운영 개선, 기성회계제도 개
 선 등 그간의 추진 성과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립
 대학 모두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립대학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선도하여 국가발전의 초
 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첫째, 자체적인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
 결한 대학과 총장직선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학칙개정
 을 한 대학들은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들을
 2012년 12월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특히 MOU를 체결한



대학들은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포함한 자체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총장직선제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총장공모제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총장후보가 총장추천위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 직선제 총장선거 때 나타났던 선거활동의 폐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되,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도,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총장선임 방법이 대학 내부규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총장 공모제를 통해 과거 임명제를 부활시키거나 낙하산인사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총장공모제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등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 도입되는 총장공모제가 각 대학의 현실에 맞는 최고의 수장을 발굴해 내는 데 기여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2012년 처음 도입한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적인 평가지침을 조속히 마련한 후 2013년 상반기 중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대학이 총장임기 4년 동안의 대학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목표를 착실히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자율지표 또는 역점지표를 엄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

셋째,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 등 기성회회계제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



하여 교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기성회계의 법률적 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7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립학교는 2000년에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통합한 바 있고 초·중·고교마저도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된 마당에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의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비회계제도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그만큼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면 된다고 하나 기성회계제도의 법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책임재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우선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이와 병행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양면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옳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판결로 인해 더 불거진 기성회의 법적 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는데 정부와 대학,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㉞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글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연이은 학교폭력 과 집단 따돌림, 학생들의 자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제정된(04. 7)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 및 제도가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였고 특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학생들의 배려·공감·협동심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시는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2월 6일 정부가 관계 장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표 하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며 긴 안목에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었고, 무엇보다 교

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학생을 끝까지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점,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인 인성교육 강화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현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되어 거둔 성과도 많았던 반면 아직도 현장에서는 몇몇 주요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의견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지 짚어보고자 한다.

I.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수립 배경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였고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은 2004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관련 부처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어 2007년 2월에 정부는 ‘5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년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저해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이처럼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책 수립과 활동들

이 시행되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흉포화해지는 등 학교폭력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에만 연연한 채 학교폭력의 발생 양상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근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부족 등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박효정, 2012).

2012년 2월 6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 된 교육현실에 대한 반성에 터해 수립되었다. 즉,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된(04.7)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 및 제도가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했



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과부, 2012).

첫째, 기존의 대책들이 성적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핵심가치인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학교 인성교육은 봉사활동, 계기교육, 강연회, 수련회 등을 통한 행사 위주의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등 비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며, 교과에서는 지필평가를 위한 지식습득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실천·체험 중심의 교육이 부족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이 미흡하여,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체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처리 과정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기존의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구속력이 미흡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전화가 교과부, 여가부, 경찰청 등 각 기관마다 별도로 지정되어 신고자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기존 경찰청 소속 ‘117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의 경우 상해·폭행·성범죄 이외의 학교폭력에 대해

서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에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과 역할이 부족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안 조사 시 학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었으며 경찰에 신고·고소된 사안의 경우 수사 개시를 이유로 법원에 넘겨진 사건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개입이 어려웠다.

넷째, 학교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가 정립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학교)생활규칙 등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인성교육이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

다섯째, 사이버 폭력의 급증 등 새로운 학교폭력의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제 마련이 미흡하였다. 최근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온라인 게임, 인터넷과 SNS 등의 교육적 역기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폭력만화·음란 동영상 등 유해한 정보에 대한 통제·감시 장치가 미비하였다.

II.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성과

1.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실천 정책으로서, 4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원적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둘째,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셋째,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등 예



방교육 확대 넷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4개 대책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으로 3개 대책이 마련되었다. 즉,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과부, 2012).

〈표1〉 직접대책

영역	핵심 과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상담 지원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 대폭 확대 • 교사-학부모 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표2〉 근본대책

영역	핵심 과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확대

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법·제도·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들이 현장에서 적합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교과부에서 내부자료로 작성된 미간행 자료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교과부, 2012).

첫째,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대책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의 핵심내용이 법제화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3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3개 시행령, 3개 기타 법령이 개정 완료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대응을 위해 교과부, 16개 시·도교육청에 정규 직제 상의 학교폭력 전담과가 신설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실), 지자체의 경우 지역위원회(시·도), 지역협의회(시·군·구),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위원회, 전담기구 등 학교폭력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에 전국적으로 17개의 117신고센터가 개소되어 가동되고 있다.

둘째,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은폐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는 현장 분위기가 조성되어 117학교폭력 신고건수 및 피해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월 1,124건에서 4월 3,592건으로 6월에는 10,9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이 직접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한 건수도 2월 480건, 4월 2,119건에서 6월 5,076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전문상담인력이 확충되어 학생들의 학교폭력 고민상담 기회가 확대되었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2011년에 922명이었으나 2012년에 1,422명으로 증가되었고 전문상담사의 경우에는 2011년 1,929명에서 2012년에 3,985명이 증가하여 학교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인력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학교 별로 학교폭력전담교사(책임교사, 교당 1명)를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Wee클래스의 경우, 2008년에 530개에서 2010년에 2,530개, 2011년 3,129개였으나 2012년 현재 4,49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Wee클래스, Wee센터 및 Wee스쿨을 통한 학교폭력 고민상담 기회가 확대되었다.

넷째,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의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실행되어 온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일회성에 그친 활동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극·뮤지컬을 활용한 체험형·참여형 예방교육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용 학교폭력 핵심 매뉴얼, 학생용 집단 따돌림 예방 워크북, 학부모용 학교폭력 핵심 매뉴얼 등 학생·학부모·교원 대상의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포레활동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포레상담 운영학교는 2011년 573개교에서 2012년에 1,176개교로, 포레중재 운영학교의 경우 2011년 10개교에서 2012년에 79개교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 388개교에서 2012년에 600개교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섯째,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교육이 확대되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실천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 학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실

시되어 학부모교육의 확대와 학부모 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Ⅲ.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써 교과부가 올해 5월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5천명, '12. 5. 9 - 5. 16),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43.0%, 학부모 63.0%, 교원 62.0%였다. 또한 학교폭력 대책 발표 후 학교폭력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생이 43.0%, 학부모 63.0%, 그리고 교원이 62.0%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1차, 12천명, '12. 2 / 2차, 25천명, '12. 5)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정도가 1차 조사 때 20.3%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9.5%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가 낮아졌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도 1차 조사에서는 17.2%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8.9%로 나타나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교과부 내부자료, 2012). 이처럼 학교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스스로 학교폭력 근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시행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안은 예방이며 예방은 인성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대인관계 대처방안 학습 등과 같은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의 차원에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대인관계 대처능력 증진 및 심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교과중심 교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내실 있는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기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제시

한 학교폭력 대책들이 일회성 대응과 처방에 머물러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최근 학교폭력이 감소되기보다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성인범죄를 뺏치는 흉포함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연령층도 초등학생으로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들이 정확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으로 시행되고 있는 2차 학교 폭력실태 조사결과뿐 아니라 향후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가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유관 기관 간에 공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은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매우 복잡적이고 역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비록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 이면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도가 · 피해자의 심리적 문제, 의료 · 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문제 해결에 관련된 기관도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학교가 아무리 예방 및 근절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협조와 지원이 안 되고 학교 밖 환경 또한 열악하고 유해하다면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 · 학교 · 사회 유관 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도 범정부, 지역 추진체계와 지역 단위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 민간단체와의 연계 협력도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들의 실질적



인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가정에서 보살핌 받지 못한 가해·피해 학생이 많다는 것과 지나친 입시경쟁 교육의 심화로 어린 나이부터 낙오자가 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는 해당 관련 부처가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시행해야만 학교폭력 근절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성과 올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 대책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과 함께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이 일회성 대응과 처방에 머물러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감소되기보다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흉포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층도 초등학생으로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실태가 성과 평가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대책들이 현장의 참여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된다

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의 감소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행한 후 효과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고 개선·보완되어야 할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인지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대책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높은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책들이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미간행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미간행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미간행 자료
- 박효정(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극복 방안. 서울교육 제206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현장르포

세계로 미래로 꿈을 엮는
SMART 참샘 교육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참샘초등학교

클
•
유소연
참샘초등학교 교사

참
샘
초등학교



태블릿pc(스마트패드)로 공부하니 가방이 가벼워져 좋아요 (4학년 박찬주)



로봇샘과 함께 수업하는 영어시간이 즐거워요! (4학년 김민경)



수업을 하면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찾은 자료와 완성한 문서를
바로 공유할 수 있어서 수업시간이 즐거워요. (6학년 박수빈)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참샘초등학교는 2012년 3월에 개교한 신설학교로, 처음부터 ‘스마트 스쿨’을 컨셉으로 구축된 학교인 만큼 기존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교육의 산실이다. 2012년 4월 1일자로 교과부 요청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스마트기기 활용수업 등을 통해 창의교육을 실현하고, 생태체험 및 학생중심 동아리활동, 배려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적 삶을 강화하는 등 창의성과 인성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교육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참샘초등학교 교육환경

참샘초등학교 스마트교육 환경의 특징은 교사와 학생, 학생들 상호간에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학습자료를 검색, 활용하고 쌍방향(교사↔학생)으로 자료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모든 교실에 녹색칠판 대신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이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 학생 전원에게 스마트패드 지원되어 학생 개인에게 적합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play space’라고 하는 넓은 복도 공간은 학생들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의·체험의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층마다 설계된 창의·인성 공간을 활용하여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층 과학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지성(IQ)공간

3층 예술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감성(EQ)공간

2층 문화소통 목적의 다목적(PQ)공간

1층 각종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글로벌(GQ) 공간

참샘초등학교 들여다보기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교가기가 기다려지는 참샘초등학교 학생들! 그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6학년 두레반 김○○은 아침 8시 25분에 학교 정문을 들어온다. 부모님은 ‘김○○ 학생은 8시 25분에 안전하게 등교하였습니다._답입교사’라는 문자서비스를 받으며 아침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자녀의 안전한 등교를 확인하지 못한 걱정을 던다.



‘내 벼가 얼마나 자랐나’ 관찰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관찰 일지를 써요

김○○은 교실에 들어와 학생증으로 무선 주파수인식(RFID)카드를 리더기에 대고 오늘의 시간표와 급식 메뉴를 확인한다. 월요일 아침활동은 식물관찰 일지 쓰기! 교실에 있는 화분과 6월에 모심기를 해 제법 자란 벼를 관찰하느라 바쁘다. 스마트 패드를 들고 ‘내 벼가 얼마나 자랐나’ 관찰하고 태양광 파고라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관찰 일지를 쓴다.

1교시에는 친구들과 뉴스를 기획한다. 복도에 있는 ‘생각키움실’에서 친구들과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다.



친구들과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요.

사회시간에는 무역과 무역이 아닌 것에 대한 교육 솔루션을 통해 선생님과 자료를 공유하며 생각을 나누고, 도덕 시간에는 자아 존중감 및 배려학습을 배우며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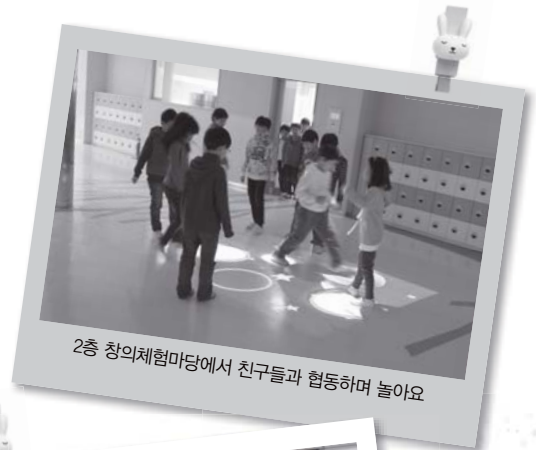
오늘 배운 내용은 그때그때 학급 '클래스팅'에 올리고 친구들의 생각에 내 의견을 덧붙여 우리 모두의 의견을 구글문서(협동학습)로 완성시켜 선생님에게 제출한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시간!

선생님이 알림장을 쓰라고 한다. 그런데 칠판에는 알림장이 없다. 김○○학생은 스마트 패드를 켜 후 우리 반의 알림장이 적혀 있는 '클래스팅'을 확인하고 가방을 정리한다.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면 부모님에게는 '김○○ 학생은 오후 2시 50분에 안전하게 하교하였습니다._담임교사'라는 문자가 발송된다.

앞으로 참샘초등학교는 ...

올해 개교한 참샘초등학교에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각자의 능력과 열정으로 스마트교육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정미자 교감은 "참샘초 교사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스마트교육은 교사가 얼마나 노력하고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일 관련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2층 창의체험마당에서 친구들과 협동하며 놀아요



스마트패드로 발표 수업을 하고 있어요



2층 생각키움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감상을 해요.

현장르포

온·오프라인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다.”
고 말했다. 정 교감은 이어 “교사의 역량과 관심, 학생의
흥미와 학부모들의 참여에 의해 스마트교육의 질이 달라
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해주 교장은 “첨단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갖춘


스마트한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학생의 학습력과 교
사의 교육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인성교육을 강
화해 지식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즐거운 참·샘·물처럼

‘참샘’은 순수한 우리말로 진짜 샘, 좋은 샘, 좋은 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참샘’은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 그리고 좋은 학부모를 상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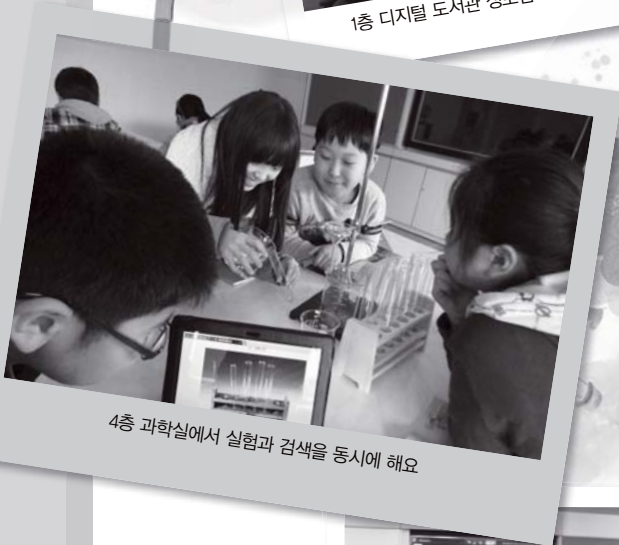
스마트교육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기 및 도
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와 수
준, 흥미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교육과 질 높은 교육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풍부한 인적 인프라와 다양한
참 품성 활동을 통한 좋은 성격, 좋은 인성, 바른 행동, 좋
은 교우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어 한국에서 뿐
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스마트한 최고의 학생
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의 운영을 통해 미래 디지털
교과서 학습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실 있는 공교육
을 통한 사교육 절감 효과로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높
이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특별실 활용을 통한 스마트교
육의 강화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창의·인성교육에 노력
하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활용과 창의·체험활동으로 학
습의 흥미를 살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발전적인 개별학습의 효과를 높여
가고 있다.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밀
어주고 이끌어주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학교 참샘초등학교이다. 



1층 디지털 도서관 정보검색대에서 독서를 해요



4층 과학실에서 실험과 검색을 동시에 해요



전자칠판과 패드로 양방향 수업을 하고 있어요



꿈을 품은 학교!
성적보다 사람교육 우선,
인성교육이 살아 있는 현장

경기 과천 문원중학교

문원중학교

글
·
김형표
경기일보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계의 화두는 공교육의 추락이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공교육에 대한 비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교육의 활성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뚜렷한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명문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내 아이는 특별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이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바로 '1등주의'이다. 1등을 하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 찍혀 버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제도권에서 밀려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왕따와 폭력이라는 기형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약자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쏟아내는 것이다.



주목 받는 창의적 교육방법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학교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기관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천 문원중학교(교장 김명순)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 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원중학교의 교육목표는 인간존중과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인간의 생명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다양한 토론과 연구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교육의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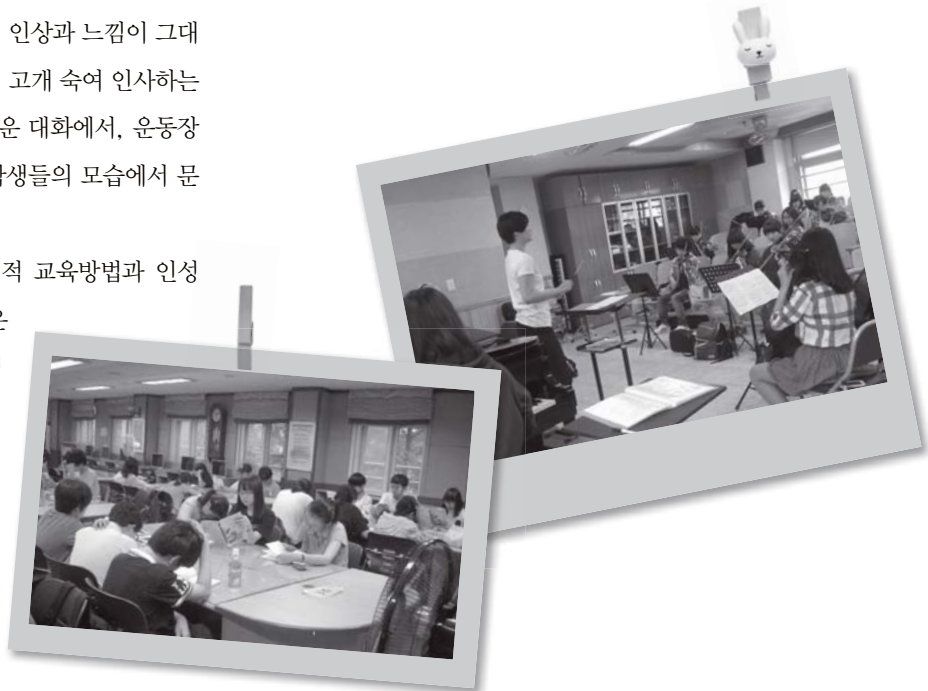
문원중학교의 방문엔 시골중학교의 인상과 느낌이 그대로 묻어났다. 학교를 방문한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학생모습에서, 친구끼리 오가는 정다운 대화에서, 운동장에서 서로 몸을 부딪치며 뛰어노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문원중의 교육목표가 엿보이는 듯했다.

김명순 교장을 만나 문원중의 창의적 교육방법과 인성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다. 김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은 수 백여 명의 학생을 똑같은 인물로 키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수 백여 가지의 다양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이 맞다. 이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인간이 순수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자연과 동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좋은 책을 읽는 것, 좋은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것, 좋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김 교장은 인간 품성은 후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선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문원중의 인성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수준별 교육과 방과후교실로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활성화

문원중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준별 교육과 방과 후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다. 문원중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수준별 교육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영어와 수학은 5등급으로 나뉘어 수준에 따라 교실을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자칫 학생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문원중은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고 연





구하는 등 창의적인 학습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학교수업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블런티어 학습을 추진, 학습능률을 두 배로 높이고 있다.

또 학교에서 부족한 학습이나 예·체능, 취미활동 등은 방과 후 교실에서 보충한다. 방과 후 교실은 학교 교사와 학부모, 전문 강사가 교사로 초빙돼 진행된다.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은 논술과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과목과 무용과 체조, 기타, 바이올린, 바둑, 한문 등 50여 과목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원중은 1인 1악기 다루기 운동을 전개해 전 교생이 1악기 이상 연주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동아리 회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록 밴드, 시·문학동아리, 미술동

아리 등의 단체는 아마추어 수준을 넘는 프로 수준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구성된 문원중 오케스트라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수학, 과학 영재반은 지난 5월 일본으로 해외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 등에서 핵융합연구소와 나고야 과학관, 도요타 산업 기술기념관, 리켄 연구소, 유니버설스튜디오, 오사카 과학기술관 등을 견학하는 등 글로벌 인재교육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바로미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 글로벌 교육입니다. 이번 해외캠프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진 과학시설을 견학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해외캠프 행사로 학생들의 눈높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김 교장은 평가했다.

독특하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문원중은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독특한 인성 프로그램이 많다. 그 중 감성 프로그램인 ‘시하루’와 건강과 협동심을 도모하는 스포츠클럽, 전통과 소통하는 풍물반, 재능을 키워 인성을 채우는 관현악반 등이 눈길





현장르포



을 끝냈다.

아침 8시 30분이면 문원중학교 교실에는 아나운서의 시 낭송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진다. 아침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전 교생이 시를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시하루'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시와 배경음악을 스스로 선정하고, 직접 시를 낭송하면서 자신이 가진 감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시하루' 프로그램은 학교 문예행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자작시 낭송과 시화전, 시 그림엽서 만들기, 시 감상문 쓰기 등 내용을 다양화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스트레스 해소와 협동, 나눔, 배려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일반 체육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줄넘기와 농구, 탁구, 배드민턴, 혼성축구, 씨름, 족구, 피구 등이 대표적인 종목이다.

문원중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학년별 리그전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경기 중에 욕을 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면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엄격히 적용, 스포츠

맨십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김 교장은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동시에 규칙과 규율을 배우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해 나눔과 배려, 인간존중 등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종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물반과 효 교육도 인기

전통과 예절이 잊혀져 가는 요즘, 문원중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풍물반과 효 교육은 온고지신의 인성교육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풍물반은 우리의 전통음악에 무심한 학생들에게 전통악기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정서함양을 위해 지난 3월에 결성됐다. 이렇게 결성된 풍물반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과천시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참가해 아마추어답지 않은 연주를 펼쳐, 농악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문원중은 또 매년 5월 경로효친 학예행사를 실시하고 있





다. 효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행사는 효를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효 만화 그리기,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원중 학생들은 지난해 과천 효 문화축제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하는 등 30여 명이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문원중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진로 포트폴리오 꿈 나비를 제작하고 있다. '꿈, 나를 찾아 비상하라'란 주제로 제작된 꿈 나비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정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꿈꾸게 되는 학생 자신의 개성과 꿈이 모두 담기도록 설계된 진로, 진학의 지침서이다.


이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비전계획 세우기, 학습계획서 작성, 성적향상 계획 및 수상관리, 적성검사 등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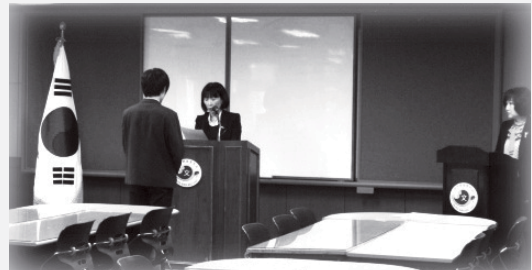
이 같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교내 왕따나 폭력을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창의교육,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김 교장은 “획일화된 교육 대신 창의적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해소하고 있다”며 “특히, 시하루와 스포츠클럽 등 인성 프로그램은 남과 나를 존중하는 의식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이어 “문원중학교는 인성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왕따와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왕따·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로 지정하고, 왕따·폭력 제로화에 도전장을 던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원중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 인성 프로그램은 아주 평범하지만,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키우는 특별함이 숨어 있었다. 



문원중학교는 선생님들이 매달 기부하여 모은 돈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교육활동(선행, 모범, 귀감이 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그린마일리지 상점 카드를 발부하고, 올해부터 한 학기 동안 상점이 가장 높은 학생들을 선정하여 학년별로 3명씩 총 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여명학교

클

•

변정훈

여명학교 교사



여명 학교

교장선생님 : “나는?”

학생들 :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교장선생님 : “나는?”

학생들 :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산다”

교장선생님 : “나는?”

학생들 :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전진한다”

교장선생님 : “미라클!”

학생들 : “미라클! 미라클!! 미라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연출되는 진풍경이다. 조회 때마다 혼화말씀 말미에 이흥훈 교장선생님이 “나는?” 하고 구호를 선창하면, 전교생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신이 나서 외친다. 조회시간 내내 졸던 학생들도 이 시간만큼은 뽀뽀한 목소리로 팔을 치켜들고 소리 높여 외친다. 일주일 간의 학교생활 중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가득 담아서....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중국에서는 무서워서,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어요”

지난 2011년 11월 11일 태국에서 50명의 탈북자를 태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1월 15일 여명학교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입국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맞이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통치 이후, 탈북자의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탈북행렬은 여전히 계속돼 2012년 현재 2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9월 입국자 기준으로 19세 이하 청소년이 3천 5백여 명, 20대 청년이 6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탈북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들도 탈북과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공백이 너무 커져 20대 후반의 나이를 넘겼음에도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 무서워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

여명학교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내는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교육”이다. 특히나 학령기를 훌쩍 넘겨버린 20대들은 급변하는 남한사회에 홀로 내던져진 무방비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급선무이며 이것이 여명학교가 문을 연 이유이자 배경이다.

이런 상황 하에 20여 개의 교회들이 뜻을 모아 2004년 9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교사 13명, 학생 30명 규모의 학교를 개교하였고, 2008년 2월 현재 위치한 중구 남산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 국내 최초로 학력인정을 받은 대안학교가 되었으며, 현재 중학교 미인가 과정 25명, 고등학교 인가과정 52명 정원의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대안학교로 8년째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에서 온 학생들, 같음 또 다름

여명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다. 평균 연령이 22~23세이다. 보통은 남한의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태국, 몽골, 베트남 같은 곳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도 넘게 도피,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나이가 다들 많은 편이다. 젊은 교사들과는 불과 10살 터울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친밀감이 남다르다. 남한 학생들의 경우 나이가 많은 북학생은 자칫 학급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하여 적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여명학교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교사들의 조력자, 동급생들의 상담자나 리더가 되어 주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많은 나이 탓에 오랜 기간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따라서 고연령 학생의 경



현장르포

우 고교 3년 과정을 학력심의를 통해 조기에 진급하거나 졸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습해야 할 내용은 많고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명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는 남한 학생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뜨겁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키가 작다. 남자 교사인 필자의 키는 165cm이다. 대한민국 여자 키의 표준이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높이이다. 하지만 이 높이가 여명학교에서도 유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1997~98년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생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학생들의 키는 작을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아주 어린 시절 중국이나 다른 제3국으로 탈북하여 남한에 일찍 들어온 학생들은 영양공급을 잘 받아 키가 180cm도 넘는다. 다른 학생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만큼 큰 학생들은 여지없이 이런 학생들이다.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어린 10대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입학하여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20~30cm씩 커버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치료 보건 및 체육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매일 아침 수업 전에 담임교사와 남산 조깅을 한다. 서울에서 가장 신선하고 풍광이 좋은 남산에서 운동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힘을 길러 준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한 학생이 1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특성화수업”을 실시한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아온 학생들에게 여가를 선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학업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요일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운동을 한다. 운동장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부득이 근처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책상에만 앉아 있던 학생들에게 이 시간은 늘 활력



이 넘친다. 학생들의 지, 덕, 체가 전인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다.

의식주 제공부터 가정·인성교육까지

여명학교 학생들 중에는 무연고 즉, 혼자 사는 학생들이 많다. 전체 재학생 60명 중 무연고 학생이 20명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편부모 가정, 조손 가정, 그리고 형제와 함께 사는 학생들의 경우도 생계를 위해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연고 학생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때문에 기숙사생은 물론이고 모든 학생들의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학교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원만한 학교 생활이 힘들다. 매월 2회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평교사들이 준비하는 “나눔조회”, 남-여학생이 따로 동성교사와 떠나는 “성교육 캠프”,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예절 및 에티켓 교육” 등 공부 이외에 많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학부모 역할, 가정의 역할까지 감당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식주 문제부터 가정교육을 포함한 인성영역까지 교육적 책임감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선생님, 상담시간 너무 좋아요. 속이 너무 시원해요”
(고3 한OO 학생)

여명학교에는 탈북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적인 불안 내지는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있다. 탈북과정에서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거나, 남한으로 입국하기까지 어린 나이에는 도저히 견어내기 힘들었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거나, 이런 심리적 문제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다. 평소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을 안고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치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방과 후 미술치료, 전문 심리상담 상담센터와 연계한 상담은 평소 마음의 깊은 상처나 고민을 쏟아내기 힘들었던 고충을 이해하고 털어주는 좋은 시간으로 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다. 물론 학기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집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학급당 10명 정원의 학생들과 담임교사의 친밀하고 긴밀한 상담도 상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남한사회 · 도시환경 적응 교육도

여명학교 학생들에게는 학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던 공산주의 북한과는 판이하게 다른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문제도 학업이나 공부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 적응 교육”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여명학교에서는 대안학교의 특성을 살려 “사회 적응 교과”를 특별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 휴대폰 개통하는 방법, 동사무소 이용하는 방법, 대한민국의 기념일, 명절, 민속놀이 등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교과목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남한 적응을 돕고 있다. 자신의 힘으로 남한에서 ‘홀로서기’에 성공하여 토요일 오후 영화 한 편이라도

스스로 예매해서 보러 가고, 은행에서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으로 뿌듯하다.

여명학교는 도시형 대안학교를 지향한다. 탈북자의 65%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심지인 영향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평양 시민이 되는 것이 많은 인민들의 꿈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거주 분포도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영향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여명학교는 도시형 대안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적응하고 실제로 생활해야 하는 환경은 북한과 같은 농업중심의 전원환경이 아니라 서울과 같은 도시환경이기 때문에 보다 수월한 적응교육을 위해 도시형 대안학교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성공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 살도록 가르쳐

여명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공”이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표”이다. 아무래도 탈북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이고, 남한에서의 삶 또한 넉넉하고 여유로운 편이 아니기에 이 부





현장르포

분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갖게 된 목표일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에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해도 뼈저리게 경험한 가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입학할 때와는 달리 학교에 들어와 생활하는 동안 학생들은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교육에 의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도 잘 해주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 해 줄까? 하지만 계속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2009년 졸업생 오OO 학생)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후원자분들의 격려방문이 날마다 이어지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매일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먹으면서 학생들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부모님 같은 분들의 격려를 받고, 엄마 손맛이 오롯이 담긴 식탁을 대하면서 북한에서 좀처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대학 입학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진로계획서”에는 여명학교에서 받았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의 글이 빠지지 않는다. 여명학교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 후원을 기억하여, 고향 북한에 학교를 짓고, 의료봉사를 하며,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갖가지 포부 속에서 학생들의 “꿈”을 발견한다. 여명학교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꿈”을 찾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민족을 하나로”라는 교훈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는 과정을 목도하게 된다.



보다 양질의 교육 제공 위해선 재정적 안정성 확보 시급

여명학교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많은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성장, 발전해 왔다. 하지만 학교의 운영에 크고 작은 고충이 적지 않다. 학교 운영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 급식, 장학금, 의료 등의 경비를 학생이 아닌 교회나 개인, 기업의 후원을 통해 충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적인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억압과 은둔 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번듯한 운동장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늘 남아 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협소한 교사(校舍)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이 가진 꿈은 남한을 넘어, 북한, 중국, 러시아로 뻗어 있어 대한민국 어떤 학교, 어느 학생보다 더 크고 넓다. “학교건물”보다 “학생”들로 더욱 자랑스러운 학교이다. 🇰🇷